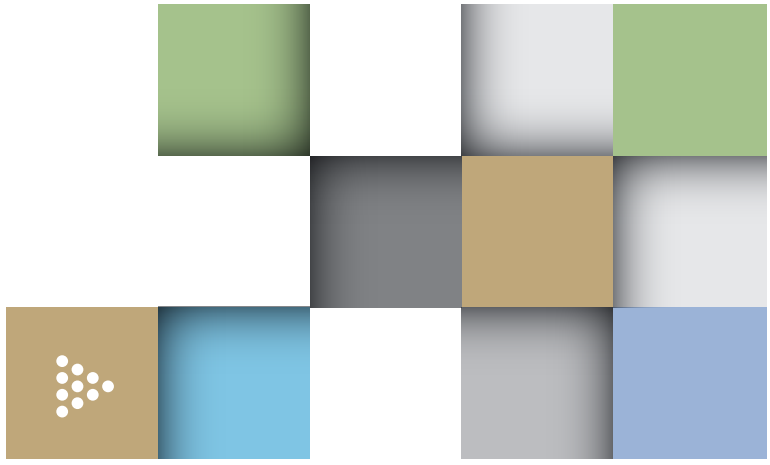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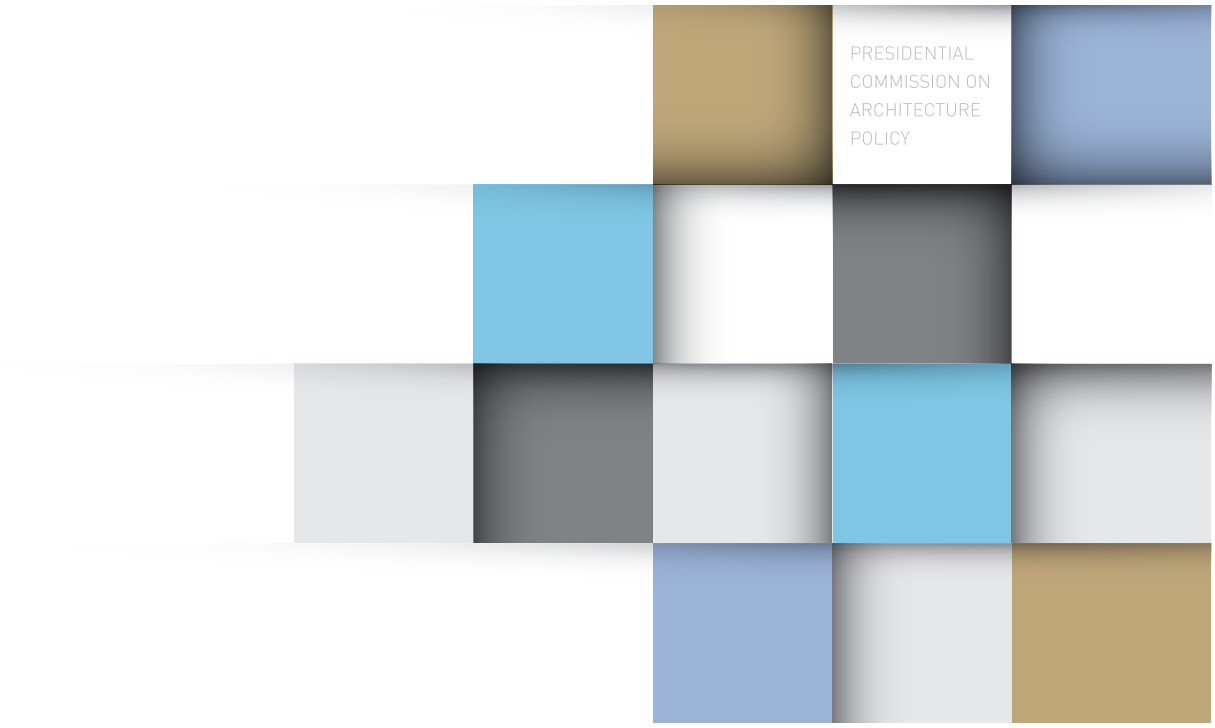
건축문화 기반의 창조경제, 국민행복

– 제3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활동보고서
(2013.12. ~ 2015.12.)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

건축문화 기반의 창조경제, 국민행복

– 제3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활동보고서



GALLERY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식(2013. 12.)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워크숍(2015. 02.)



▲ 건축산업 활성화 포럼 발족식(2015. 06.)



▲ 건축산업 활성화 포럼 공청회(2015. 11.)



▲ 시 · 도 공무원 워크숍(2015. 09.)



▲ 녹색건축한마당(2015. 10.)



▲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2015. 10.)



▲ 전국순회 건축 도시정책 포럼(2015. 11.)

발간사

건축물은 인류 문명과 함께 태어나 국가 인프라와 국민의 삶의 공간이 되며 한 나라의 문화를 상징하는 자산입니다.

우리 국민은 하루에 20시간 이상을 건축물 안에서 생활을 영위합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노는 모든 생활이 건축물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건축물은 우리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겠습니다.

문화 · 경제적인 측면에서 건축물은 문화와 기술력의 상징으로 국가, 도시, 조직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결정해 왔으며,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건축의 현황은 어떨까요?

과거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그간 우리의 건축 정책은 짧은 시간에 좀 더 많은 집과 산업시설, SOC를 공급하는 것에 집중하여 왔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적합한 건축정책이었고, 또 성공적인 결과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양적인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된 지금 우리는 개발과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획일적인 국토와 도시 환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양적 공급에 치중하여 아파트 등 획일화된 주택을 공급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고, 교량 · 공항 · 항만 등 주요 SOC 시설은 높은 상징성을 갖지 못했으며, 단조롭고 개성 없는 국토이미지로 경제적 위상에 비해 낮은 국가브랜드 순위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양적 성장보다 문화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질적 성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건축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도전의 시대에 부응하여 국가 경제 수준에 부합하는 선진국 수준의 건축 · 도시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건축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2008년 12월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제1기와 제2기를 거치면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인 건축정책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립된 위원회로서 그간 '디자인 코리아', '녹색성장' 등 핵심 국정기조를 건축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국토환경 디자인의 개선 및 건축문화 진흥'의 설립목적에 맞는 다양한 과제발굴과 함께 우리 건축계의 여러 목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 제3기 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제3기 위원회는 '건축문화기반의 창조경제, 국민행복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공간복지 강화로 행복한 삶터 구현', '건축산업의 고도화 · 다변화로 창조경제 실현', '건축문화 기반의 창조적 장소 만들기로 문화강국 조성'이라는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제3기 위원회의 정책 제안은 제4장에 수록)

또한, 국가건축정책에 관한 범건축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건축정책 콘퍼런스」 개최, 건축 분야에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건축산업 활성화 포럼」의 운영, 전국 순회 건축 · 도시 정책 포럼,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등 다양한 대외 활동을 통하여 국민 행복을 위한 건축의 역할을 고민하여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계획가이자 건축가로서 제3기 위원장을 역임하셨던 김석철 교수님께서 지난 5월 소천하셨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상황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국민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않으셨던 고 김석철 위원장님과 제3기 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위원님들, 그리고 기획단 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에 대해 조언하고 다방면으로 지원해주신 건축 · 도시 분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2016년 9월
제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최 해 성

발간사 8

제 1 장 위원회 현황

제1절 설립배경 14
제2절 위원회 구성 16
제3절 주요 기능과 역할 19

제 2 장 위원회 회의

제1절 전체회의 22
제2절 합동연석회의 28
제3절 분과회의 37
1. 정책조정분과회의 37
2. 국토환경디자인분과회의 39
3. 건축문화진흥분과회의 43
제4절 건축 5단체장 간담회 47

제 3 장 위원회 활동사항

제1절 2014 건축정책 콘퍼런스 50
1. 추진배경 50
2. 추진경과 50
3. 주요 내용 52
4. 성과 및 의의 66
제2절 2015 건축산업 활성화 포럼 70
1. 추진배경 70
2. 추진경과 71
3. 주요 내용 75
4. 성과 및 의의 79

제3절 전국순회 건축 · 도시 정책 포럼 80
1. 추진배경 80
2. 추진경과 80
3. 주요 내용 81
4. 성과 및 의의 89

제4절 시 · 도 건축 및 도시 행정 공무원 워크숍 91
1. 추진배경 91
2. 추진경과 91
3. 주요 내용 92
4. 성과 및 의의 94

제5절 건축진흥원 추진단 운영 96
1. 추진배경 96
2. 추진경과 97
3. 주요 내용 97
4. 성과 및 의의 100

제6절 건축정책기본계획 심의 101
1. 추진배경 101
2. 추진경과 102
3. 주요 내용 104

제7절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선정 105
1. 추진배경 105
2. 추진경과 105
3. 주요 내용 106
4. 성과 및 의의 106

제 4 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책제안

부 록
1. 위원명단 134
2. 위원회 활동 언론보도 135
3. 위원회 연구용역 수행실적 141
4. 기획단 직원 명단 142

CONTENTS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

PART 1

제 1 장
위원회 현황

제**1**절 ▶ 설립배경

제**2**절 ▶ 위원회 구성

제**3**절 ▶ 주요 기능과 역할

제 1 절 | 설립 배경

우리나라의 국토환경은 경제개발 시대의 공급 중심 정책으로 인해 경제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격 있는 환경으로 거듭나지 못했다. 또한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양적 충족은 이루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다.

그동안 우리 건축문화는 각 지역이 가진 특성이나 정체성을 살려내기보다는 획일적 개발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결과적으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특성화된 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정부에서는 부처별로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고 있으나 가격경쟁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설계사와 시공자로는 독창적인 공공건축물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게다가 정부부처 간에 정책을 원활하게 조율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중복 투자가 되기도 하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국토환경을 구성하는 건축환경이 디자인을 비롯해 질적인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건축문화 수준은 세계적이다.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석굴암, 불국사, 창덕궁, 수원화성 등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만 보더라도 우리의 건축문화유산이 얼마나 찬란한지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조상이 남겨 놓은 이런 훌륭한 건축자산을 바탕으로 기술적으로 발달한 현대에는 더 좋은 건축물을 만들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제 양적 성장을 중시하는 개발 중심 시대에서 벗어나 문화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질적 성장 시대에 걸맞은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건축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장기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됐다. 이에 따라 2007년 12월 21일 국토환경 디자인을 개선하고 건축문화 진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토의 품

격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기본법」(법률 제8852호)을 제정 · 공포하였다. 동 법에서는 건축 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와 건축정책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줄여서 '국건위'라고 표기)의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건축기본법」은 공포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령 제정과 함께 2008년 6월 22일 시행됐다. 동 법에 근거하여 국건위 민간위원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기본법이 제정 · 공포된 지 근 1년 만인 2008년 12월 10일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간위원 위촉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2009년 1월 2일 국건위 사무국인 국가건축정책기획단이 발족되어 본격적인 국건위 운영을 위한 조직과 제도의 틀을 갖추었다. 이렇게 건축정책을 범부처적으로 심의 조정하는 최초의 법정기구인 국건위를 구성함으로써 건축의 공공성 구현과 문화적 가치 향상 등 국토환경 디자인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국건위 설립의 근거법인 「건축기본법」은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구성',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정 지원',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이 주요 내용이다. 「건축기본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 · 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기본 이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공동의 노력으로 국민의 안전 · 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 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을 창조하고 조성하여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라 제3기 국건위 위원은 당연직 정부위원이 된 해양수산부장관을 추가하여, 당연직 위원 10명과 위촉위원 13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으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계획가이자 건축가인 김석철 명지대 석좌교수가 지명되어 2013년 12월 16일에 발족하였다.

제 2 절 |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당연직위원과 건축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임기 2년의 위촉위원으로 나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2013년 12월 제3기 위원회 출범 당시 당연직위원은 10개 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장관이었으며, 위촉위원은 건축 · 도시 · 조경 · 문화 분야 민간 전문가 중에서 13명을 위촉하였다.(위촉위원 명단 표 1 참고)

위원회는 위원회 훈령에 따라 위촉위원 간의 원활한 업무협의 처리 등을 위해 위원장이 지명하는 운영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제3기 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 온영태 위원이 지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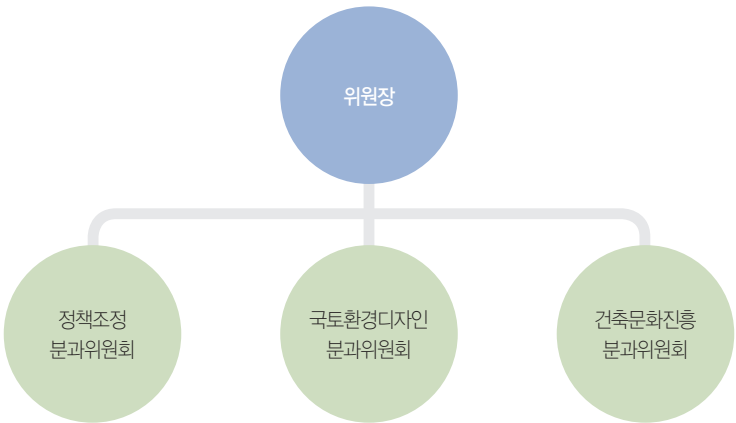
위원회는 소관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으며, 동 위원회는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3개의 분과위원회인 정책조정분과위원회,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를 두었으며, 각각의 분과위원회는 〈표 2〉와 같이 구성되었다.

〈표 1〉 제3기 국건위 위촉위원

성명	주요 경력	비고
김석철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위원장
박경립	강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분과위원장
이승복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김지민	목포대학교 산업기술대학원 원장	
하기주	경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온영태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운영위원, 분과위원장
이정면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석정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권영숙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회장	
박소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세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박찬용	영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정형민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분과위원장

〈표 2〉 제3기 국건위 분과위원 구성

분과위원회	분과위원
정책조정분과위원회	박경립(분과위원장) 이승복, 권영숙, 이정면, 김세용, 하기주, 김지민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온영태(분과위원장) 김세용, 이석정, 박소현, 이승복, 박찬용, 이정면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	정형민(분과위원장) 박찬용, 하기주, 김지민, 권영숙, 이석정, 박소현



위원회 조직도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기본법」에 따라 기획단을 두고 있다. 국가건축정책기획단의 단장은 국토부의 건축정책관이 겸임하도록 하였으며,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 직제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업무가 포함되어 업무를 수행 중이다.

제 3 절 | 주요 기능과 역할

위원회는 건축 분야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부처 건축정책의 조정 및 그 밖의 「건축기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한다. 따라서 동 위원회는 「건축기본법」 제14조에 따라 1.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포함한 건축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건축 분야 발전에 관한 주요 사업의 지원 3.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축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5. 국민의 건축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에 관한 사항 6. 「건축기본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7. 건축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건축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건축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을 지정하는 경우 국건위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의 개선 ·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도 국건위가 심의한다.(2016년 2월부터 시행)

기획단은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1.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 준비 2.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작성 3.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 · 연구 4. 그 밖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모든 업무 지원 등을 담당한다.

위원회의 일반적 업무처리 절차는 합동연석회의에서 후보과제에 대한 사회적 이슈와 파급효과 그리고 국정철학 등을 고려해 과제 리스트를 선정하면, 과제 성격에 적합한 담당 분과위원회를 선정하고, 필요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회 합동연석회의에서 심층 검토 결

과를 기초로 논의를 확정한다.

과제검토는 기획단의 사전검토, 분과위 배정, 분과위 검토 등을 거쳐 합동연석회의에서 최종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분과위 및 합동연석회의에서 반복적으로 과제를 검토함과 아울러, 관계 부처의 협의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부처 등과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조율한 후 반영하며, 타 위원회와 중복되는 과제는 위원회 간 사전 실무협의 등을 거쳐 과제담당 주체를 결정한다.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

PART 2

제 2 장
위원회 회의

제1절 ▶ 전체회의

제2절 ▶ 합동연석회의

제3절 ▶ 분과회의

제4절 ▶ 건축 5단체장 간담회

제 1 절 | 전체회의

제3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총 6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개최일자와 상정안건은 〈표 3〉과 같다.

〈표 3〉 제3기 국건위 전체회의

회차(누적)	일시	장소	주요 내용(안건 등)
1회 (12차)	2013. 12. 27.	세종청사(6동)중회의실	• 위촉식, 국건위 조직 및 기능, 관련 규정 개정 •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 「한국건축규정 추진방안」 보고
2회 (13차)	2014. 02. 06.	서면	• 2014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3회 (14차)	2015. 01. 20.	서면	• 2015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4회 (15차)	2015. 05. 22.	서울(종로) 국건위 회의실	•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 건축산업 활성화 방안 포럼 및 TF 추진계획(안)
5회 (16차)	2015. 07. 02.	서면	• 건축진흥원 추진단 구성 및 운영(안)
6회 (17차)	2015. 12. 08.	서면	• 제1차 건축자산진흥기본계획 • 2016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1. 제1회 전체회의

제3기 위원회의 제1회 전체회의는 2013년 12월 2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제1회 전체회의는 김석철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의 위촉위원과 2명의 정부위원(문화체

육관광부, 국토교통부)가 참석하였다.

이 날, 안건 논의에 앞서 제3기 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식이 진행되었으며, 대통령을 대신하여 김석철 위원장이 위촉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제1회 전체회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외 13개 규정 개정
- 국건위의 목적 및 기능, 운영방향 등 국건위 소개
-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및 한국건축규정 추진 방안 보고 (국토교통부)

회의 결과 국건위의 운영세칙 외 13개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어서 국민이 행복한 부동산 등 건축계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주요 의견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도록 적정가격의 토지 발굴과 창의적 설계 및 최적 공사비가 반영된 건축시장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창조건축 + IT를 접목한 창조적 재건축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도농복합의 창조적인 도시모델을 개발하여 수출시장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제3기의 활동 방향에 대하여 위원들의 자유 토론이 있었으며 국민안전, 문화융성, 저층주거지, 농촌 문화보급, 건축교육, 통일대비 건축비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제1회 전체회의 (2013. 12.)

2. 제2회 전체회의(서면)

제2회 전체회의는 2014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서면심의로 추진하였다.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건축기본법」 제2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사업, 건축디자인 개선사업 등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안건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에서 상정하였다.

2014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공모에는 총 26개 지자체가 응모하였으며, 국토부에서 선정위원회를 운영하여 5개소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국건위 심의를 거쳐 최종 4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심의 결과 경기 수원시, 경북 김천시, 광주광역시, 충남 공주시 총 4곳이 최종 선정되었다.

3. 제3회 전체회의(서면)

제3회 전체회의는 제2회와 동일하게 2015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서면심의로 추진하였다.

2015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선정위원회에는 제3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온영태 위원이 선정위원장으로, 박소현 위원와 박찬용 위원이 각각 선정위원으로 참석하였다.

시범사업 공모에는 총 26개 지자체가 응모하였으며, 선정위원회를 운영하여 8개소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국건위 심의를 거쳐 최종 6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심의 결과 국토부에서 올린 순위대로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어 충남 논산시, 경기 고양시, 대구 남구, 전남 강진군, 경북 상주시, 경기 광주시가 최종 선정되었다.

4. 제4회 전체회의

제4회 전체회의는 2015년 5월 22일 서울 종로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제4회 전체회의는 김석철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촉위원과 2명의 정부위원(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이 참석하였다.


▲ 제4회 전체회의(2015. 05.)

이 날 상정된 안건은 총 2건으로 첫 번째 안건은 국토교통부에서 상정한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심의이고, 두 번째 안건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기획단에서 상정한 건축산업 활성화 포럼 및 TF 추진계획이었다.

첫 번째 안건은 원안 의결되었으며, 과제별로 주관부처, 협조부처 등 일부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문구 · 표현 등을 보완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자체의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등을 통해 성과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연계를 이루어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조성기술을 수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방안(예 : 해외 공관의 건축설계 품격 향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

두 번째 안건은 보고 안건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되, 포럼과 TF에서 다루는 정책 범위를 한정하지 말고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정책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5. 제5회 전체회의(서면)

제5회 전체회의는 건축진흥원 추진단 구성 · 운영(안)에 대한 서면심의로 개최되었다.

건축진흥원의 근거법인「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2013. 06. 04. 제정, 2014. 06. 05.시행)이 제정된 이후 건축 3단체는 공동으로 건축진흥포럼을 창립하여 건축진흥원 설립을 요구하였으며, 국토교통부도 2015년 예산에 건축진흥원 예산을 반영하여 신청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건축계의 요구에 따라 2014년 10월부터 11월까지 건축진흥원설립 추진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2016년 예산 신청을 앞두고 국건위 위원 대표 4인과 기획단장, 건축 3단체, 건축진흥포럼 대표, 국토부 과장이 참석한 건축진흥원 추진단 준비회의를 3차례 개최하였다.

그리고 제12차 합동연석회의에서 국건위와 건축진흥포럼이 '건축진흥원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하여 공공기관으로 건축진흥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제3기 국건위 종료(2015. 12. 16.) 전에 설립과 관련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로 하고 추진단을 국건위의 공식 활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체회의에 상정하였다.(추진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3장 제5절 참고)

서면심의 결과 원안대로 결정되어, 건축진흥원 추진단은 제3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공식활동이 되었다.

6. 제6회 전체회의(서면)

제6회 전체회의는 서면심의로 진행되었으며,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첫 번째 안건은 국토교통부에서 상정한 제1차 건축자산진흥기본계획이다. 이 계획은「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계획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 및 국건위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기억과 일상이 어우러진 건축, 풍요로운 삶의 자산'이라는 비전 아래 2대 목표와 6대 실천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건축자산에 대한 국민적 가치 확산과 창조적 활용을 위한 토대 구축 등 첫 국가차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두 번째 안건은 국토교통부에서 상정한 2016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이다.(2015년까지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2015년과 마찬가지로 온영태 위원이 선정위원장으로, 박소현 위원와 박찬용 위원이 각각 선정위원으로 참석하였다.

2016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공모에는 총 28개 지자체가 응모하였으며,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5개소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국건위 심의를 거쳐 최종 3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심의 결과 국토부에서 올린 순위대로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어 경남 밀양시, 인천 옹진군, 경기 시흥시가 최종 선정되었다.

제 2 절 | 합동연석회의

합동연석회의는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가 참여하는 회의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사실상 위촉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회의로 운영되고 있다.

제3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총 15회의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합동연석회의에서 논의한 안건은 〈표 4〉와 같다.

〈표 4〉 제3기 국건위 합동연석회의

회차	일시	장소	주요 내용(안건 등)
제1차	2014. 02. 13.	서울(종로) 국건위 회의실	• 3개 분과위원회 구성 및 국건위 회의 운영계획 • 제3기 국건위 정책방향
제2차	2014. 03. 14.	서울(종로) 국건위 회의실	• 국건위 분과별 업무 분장 •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추진 현황 • 건축 5단체장 간담회 및 주요 행사 추진계획
제3차	2014. 04. 18.	서울(종로) 국건위 회의실	• 국건위 정책과제 추진안
제4차	2014. 07. 25.	서울(종로) 국건위 회의실	• 국건위 전시 및 콘퍼런스 추진 방안
제5차	2014. 09. 26.	서울(종로) 국건위 회의실	•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개최계획 • 대한민국 건축문화 대토론회 개최계획 • 2014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추진현황
제6차	2014. 10. 17.	서울(종로) 국건위 회의실	• 국건위 콘퍼런스 추진계획 확정 • 2015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추진방안
제7차	2014. 11. 13.	서울(종로) 국건위 회의실	• 건축진흥원 추진방안 • 감리공영제 대응방안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검토

회차	일시	장소	주요 내용(안건 등)
제8차	2014. 12. 17.	서울(종로) 국건위 회의실	• 계약제도 개선 등 공공건축 내실화 방안 • 2014 건축정책 콘퍼런스 결과 보고 • 2015 국건위 주요 사업 추진 방안
제9차	2015. 01. 16.	서울(종로) 국건위 회의실	•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결과 • 2015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방안 • 2015 국건위 신규행사 추진 계획
제10차	2015. 03. 27.	서울(종로) 국건위 회의실	• 「건축산업 활성화 방안」 추진 계획 • 2015 국건위 용역 추진 계획안 • 2015 국건위 순회 포럼 및 시 · 도 공무원 워크숍 추진
제11차	2015. 04. 30.	서울(종로) 국건위 회의실	• '세운상가 활성화'설계공모 자격 • '건축의 날'운영 개선 계획
제12차	2015. 06. 26.	서울(종로) 국건위 회의실	• 건축진흥원 추진단 구성 및 활동 계획(안) • 건축산업 활성화 포럼 개최 계획
제13차	2015. 07. 24.	서울(종로) 국건위 회의실	• 대한민국 녹색건축 대전 • 건축인 위상 개선 추진
제14차	2015. 11. 06.	서울(종로) 국건위 회의실	• 제1차 건축자산진흥기본계획 초안 보고 • 2016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평가계획
제15차	2015. 12. 15.	리츠칼튼호텔 금강홀	• 제3기 국건위 활동 정리 및 마무리

1. 제1차 합동연석회의(2014. 02. 13.)

제1차 합동연석회의에서는 제3기 국건위 정책방향(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전 3차례의 정책기획 간담회에서 도출한 정책 방향에 대해 동의하며 정책과제 내용을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목 변경 등을 검토하고 제3기 국건위가 집중할 실천과제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국건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건축 · 도시와 관련하여 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련 사업에 대해 조정 역할 수행과 시너지 창출을 유도하고 개별 부처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발굴하고 브랜드화하여 국건위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

견이 제안되었다.

추가로 1970년대 새마을 운동(농촌공동체)에 대응하는 '신도시공동체' 추진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안되었다.

2. 제2차 합동연석회의(2014. 03. 14.)

제2차 합동연석회의에서는 그간 분과위원회별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제3기 국건위 정책방향(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정책조정 분과에서는 건축 정책 · 제도 개선 측면에서 7개 과제(친환경에너지타운, 마을형 어린이집, 건축법 체계 개편, 국제행사 지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후속작업, 농어촌 주거복지, 방재 관리 선진화)를 제시하였고, 국토환경디자인분과에서는 기존 3+1 정책방향을 수정 · 보완하여 10개 세부과제(소외계층 주거복지, 근린생활공간 개선, 동네건축가, 공급형태 다변화, 건축산업 해외진출, 창조계층 도시공간, 건축자산 고부가가치화, 통일 관련 정책과제 등)를 제시하였다. 건축문화진흥분과에서는 건축문화진흥 과제를 수정 · 보완하여 6개 과제(유휴 건축자산 활용, 근린재생사업, 건축서비스산업 인력, 신한옥 · 한옥마을, 건축도시박물관, 전통 유적의 창조적 활용)를 제시하였다. 세 분과에서 각각 제안한 과제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중복되는 과제를 정리하고 분과별 역할 분담을 하기로 하였다.

추가 정책 구상으로 지방 농촌도시 활성화(농업+특화산업+관광)를 추진하고 공장생산 아파트(철골조) 사업 육성 및 해외수출 방안도 국건위 정책사업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제안되었으며, 새로운 과제 논의 · 결정을 위한 워크숍 등 심층 논의의 장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3. 제3차 합동연석회의(2014. 04. 18.)

제3차 합동연석회의에서는 정책과제의 주제를 확정하고 세부 과제 추진 방향을 공유하였다. 먼저 3기 국건위 대표과제(over-riding theme)는 '행복한 부동산'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기존 3+1의 정책과제 구성의 큰 틀은 유지하고 기존 분과위에서 논의된 과제는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되, 구체적

인 과제 문서화 및 하위 관련 과제 등은 지속해서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정책과제는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긴밀하게 연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향후 세부 과제별 담당 위원을 정하고 T/F 구성 등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제3차 회의에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주도하는 전시회 및 국제콘퍼런스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졌다.

4. 제4차 합동연석회의(2014. 04. 18.)

제4차 합동연석회의에서는 국건위 콘퍼런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콘퍼런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분과위에서 논의하도록 하되, 3개 정책방향을 각각 세션으로 하고 13개 과제에서 주제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콘퍼런스는 제도권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내실있는 콘퍼런스를 위하여 국내 콘퍼런스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콘퍼런스 참석자와 주제에 적합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덧붙여 보고 사항으로 그간의 운영위원회에 개최 결과와 기획단 조직 현황이 보고되었다.

5. 제5차 합동연석회의(2014. 09. 26.)

제5차 합동연석회의에서는 국건위 또는 정부부처 등에서 추진 중인 행사계획이 보고되었다. 먼저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한옥공모전에 대해서는 공모전 심사위원장인 김지민 위원이 필요하면 시상 등 위원장 역할을 대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대한민국 건축문화 대토론회와 국건위에서 추진하는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추진현황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로 논의하였다. 아울러, 국건위의 주요 안건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자체 워크숍 개최가 제안되었다. 또한 세월호 참사, 지방선거 등으로 2014년에는 추진되지 않은 전국순회포럼이나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등 의미있는 행사는 내년에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2014 국건위 콘퍼런스는 11월 중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과제 담당위

원들과 기획단, AURI, 과제 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건축계에서 제기한 건축진흥원과 감리공영제에 관하여서는 추가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하고, 5단체장 간담회 추진방식 변경도 논의되었다.

6. 제6차 합동연석회의(2014. 10. 17.)

제6차 합동연석회의에서는 2015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확정되었으며, 시범사업 선정위원회에 온영태(위원장), 박찬용, 박소현 위원이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후, 그간 분과회의에서 논의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져 국건위 콘퍼런스 계획과 용역 추진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고, 콘퍼런스 결과 등 전체 정책과제를 총괄 정리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건축 · 도시 공간 관련 법령 제 · 개정,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국건위와 협의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7. 제7차 합동연석회의(2014. 11. 13.)

제7차 합동연석회의에서는 이전에 제기되었던 건축진흥원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건축계(FIKA)는 "건축진흥원은 기존의 공공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건축계 자체적으로 설립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국건위는 건축계 의견을 존중하여 건축계가 자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는데, 차기 건축 및 도시 관련 직무능력표준의 제 · 개정 검토 시 국건위 사전검토 및 의견 회신 절차를 요구하도록 하고, 향후 용역 등을 통해 국가직무능력표준 전반(대분류 포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아울러 콘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진행 준비 및 홍보 등에 주력하고 관련 업무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8. 제8차 합동연석회의(2014. 12. 17.)

제8차 합동연석회의에서는 콘퍼런스 개최 결과와 2014년 용역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콘퍼런스 결과를 잘 정리하고, 진행 중인 용역에 대하여는 내실있는 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국토부에서 「계약제도 개선 등 공공건축 내실화 방안」을 보고하였는데, 공공건축가 제도는 특정 시・도의 사례를 따르기보다 당초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고, 공공건축 지원센터의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기획 및 발주 프로세스 개선' 토론회의 정례화 검토를 제안하였다.

이어지는 자유토론에서는 2014년에 선정한 주요 어젠다를 현재 진행하는 용역 등을 통해 내실있게 연구하여 정책과제로 정리하여야 하며, 주요 과제에 대하여는 정례 정책포럼 등 활발한 논의의 장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9. 제9차 합동연석회의(2015. 01. 16.)

제9차 합동연석회의에서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장소만들기 활성화를 위하여 선정되는 사업 개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며, 선정이 안 된 사업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어서 2015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면서, 국건위에서 제안할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타 부처 관련 안건도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 수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3기 국건위에서 추진할 큰 주제를 잡기 위하여 자체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2015 국건위 신규행사 추진 계획을 논의하였다. 지방 순회포럼에서 지역 현안 · 정책 · 제도 등을 청취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포럼에서 건의된 내용이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순회포럼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건축 · 도시 공무원 워크숍은 반응이 좋았으며 지방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안건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10. 제10차 합동연석회의(2015. 03. 27.)

제10차 합동연석회의에서는 국건위가 주도하는 「건축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과 TF를 구성 · 운영하기로 하였다. 아이템은 건축산업 활성화와 직결되는 소수의 핵심 아이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추진할 아이템은 이후 국건위 내에서 별도 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2015 국건위 용역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지방 순회포럼과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11. 제11차 합동연석회의(2015. 04. 30.)

제11차 합동연석회의에서는 '세운상가 활성화' 설계공모 자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논의에서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절차와 디자인 과정은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제 공모에서는 특정 국가의 라이선스를 요구하지는 않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의견이 모아졌으며 다만, 우리나라 건축사가 해외에서 공모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는지 건축사협회의 소명자료를 받고 최종 입장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일반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건축진흥원 추진단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건축의 날 운영 개선 계획과 순회포럼, 국건위 전체회의 개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12. 제12차 합동연석회의(2015. 06. 26.)

제12차 합동연석회의에서는 '건축진흥원 추진단 구성 및 활동 계획(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건축진흥원 추진단에 참여할 위원과 예산확보 활동, 관련 용역발주 등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추진단은 전체회의(서면)에서 국건위 공식 활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후 건축산업 활성화 포럼과 전국순회 건축 · 도시 정책 포럼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13. 제13차 합동연석회의(2015. 07. 24.)

제13차 합동연석회의에서는 업계에서 건의한 건축인 위상 개선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를 위하여 발주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기공식 · 준공식 등에 건축가를 초청하도록 하고 설계자에 대해서도 실명제 시행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그 외 녹색건축대전, 지방 순회포럼, 건축진흥원 추진단 활동, 시 · 도 공무원 워크숍 등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있었다.

14. 제14차 합동연석회의(2015. 11. 06.)

제14차 합동연석회의에서는 제1차 건축자산진흥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계획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내용, 보고서 체계를 보다 이해가 쉽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건축자산 활용을 논의하는 것 자체로도 의미있으나, 향후 실행력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아울러, 2016 국토환경 디자인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계획을 논의하였다.

15. 제15차 합동연석회의(2015. 12. 15.)

제3기 위원회의 마지막 연석회의인 제15차 합동연석회의는 제3기 국건위 활동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자리로 리츠칼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먼저 김석철 위원장의 인사말씀과 김진숙 기획단장의 감사 말씀이 있었고, 그간 국건위 활동의 노고에 감사하면서 위원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이어서 김석철 위원장이 기획단에서 활동한 직원들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이후 제3기 활동을 정리하는 영상을 시청한 후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소감을 이야기하고, 기념 촬영을 하면서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회의 후 오찬간담회가 이어졌으며 오찬에는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이 참석하여 그간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 제15차 합동연석회의(2015. 12.)

제 3 절 | 분과회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 제13조 제4항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 및 위원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 3기 위원회에서는 각 분과(정책조정분과, 국토환경디자인분과, 건축문화진흥분과)의 위원장을 각각 지명하고 분과 간 원활한 의견소통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제5항에 따라 위촉위원 1명이 2개의 분과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1. 정책조정분과회의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정책조정분과회의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정책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간 건축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기획 · 설계 등에 대한 심의 · 조정
4) 건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다른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

제3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총 6회의 정책조정분과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정책조정분과회의

〈표 5〉 제3기 국건위 정책조정분과회의

회차	일시	장소	주요 내용(안건 등)
제1차	2014. 02. 28.	서울(종로) 국건위 회의실	• 정책조정분과 과제 추진 방향 • 위원별 역할 분담
제2차	2014. 03. 07.	서울(종로) 국건위 회의실	• 정책조정분과 과제 내용 구체화
제3차	2014. 04. 09.	서울(종로) 국건위 회의실	• 분과위원회별 과제 내용 검토 및 조정
제4차	2014. 08. 05.	서울(종로) 국건위 회의실	• 건축 규제 혁신 방안 • 제로에너지 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
제5차	2014. 10. 07.	서울(종로) 국건위 회의실	• 정책조정분과 용역 진행 현황 보고 • 건축진흥원 추진 방안
제6차	2014. 10. 29.	서울(종로) 국건위 회의실	• 건축정책 콘퍼런스 추진계획 • 감리공영제 추진 현황

에서 논의한 안건은 〈표 5〉와 같다.

제1차 정책조정분과회의(2014. 02. 28.)에서는 정책조정분과의 과제 추진 방향과 위원별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 정책조정 분과에서는 부처 간 정책조정이 필요한 과제, 규제개선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타 분과 과제에 대해서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과제는 함께 검토하며, 국가 건축정책이라는 큰 관점에서 과제를 추진하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되었다.

제2차 정책조정분과회의(2014. 03. 07.)에서는 정책조정분과에서 다룰 과제 내용이 제안되었다. 구체적으로 건축법 전면 개정 추진, 국제대회 지원, 저출산 시대에 대비하여 보육여건 개선방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 경제혁신 · 통일 · 창조경제와 연계한 건축 · 도시 과제 발굴, 지진 및 기후변화 관련 방재 기준 선진화 방안 마련 등이 제안되었다.

제3차 정책조정분과회의(2014. 04. 09.)에서는 운영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제안된 과제 내용을 검토하고 분과별로 조정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논의를 토대로 분과별 역할 분담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제4차 정책조정분과회의(2014. 08. 05.)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 규제 혁신 방안과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였다. 첫 번째 안건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두 번째 안건에서는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를 위한 설계 산업구조 정상화 및 기반 구축 노력이 필요하며, 시범사업에서 예상되는 당면 문제점 해결 및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제5차 정책조정분과회의(2014. 10. 07.)에서는 추진 중인 용역 진행 현황을 보고받고, 건축진흥원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날 건축진흥포럼 대표로 서울과기대 고일두 교수가 회의에 참석하여 현황을 보고하고 건축진흥원은 지정이 아닌 설립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토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제6차 정책조정분과회의(2014. 10. 29.)에서는 건축정책 콘퍼런스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감리공영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감리공영제에 대해서는 3단체가 합의하도록 하고, 합의 내용을 존중하되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후 합동연석회의에서 논의하여 입장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지난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건축진흥원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서 건축계(FIKA)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건축진흥원을 공공기관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범건축계의 협력과 자체적인 노력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2. 국토환경디자인분과회의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국토환경디자인분과회의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디자인 향상에 관한 사항
2) 「건축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3)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추천에 관한 사항
4) 지속 가능한 경관조성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등

제3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총 6회의 국토환경디자인분과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국토환경디자인분과회의에서 논의한 안건은 〈표 6〉과 같다.

〈표 6〉 제3기 국건위 국토환경디자인분과회의

회차	일시	장소	주요 내용(안건 등)
제1차	2014. 02. 27	서울(종로) 국건위 회의실	• 3기 국건위 정책방향에 대한 분과 중점 이슈 • 분과 운영계획 전반
제2차	2014. 03. 06	서울(종로) 국건위 회의실	• 국토분과 정책방향 및 중점 이슈 선정 논의 • 통일대비 국토비전 관련 대책
제3차	2014. 04. 08	서울(종로) 국건위 회의실	• 국토분과 추진과제 선정
제4차	2014. 07. 31	서울(종로) 국건위 회의실	• 국가직무표준(NCS) 분류체계 관련 논의 • 정책과제 및 용역추진 방안
제5차	2014. 10. 10	서울(종로) 국건위 회의실	• 국토분과 담당과제별 용역 콘퍼런스 추진점검 • 국가직무표준 및 감리공영제 논의

제1차 국토환경디자인분과회의(2014. 02. 27.)에서는 3기 위원회의 3+1 정책방향'에 대한 국토환경디자인분과의 중점 이슈 선정과 분과 세부운영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복한 부동산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을 위해 청년주거, 중산층 대상의 저층 · 저밀주거 등 다양한 계층에 대응한 민간부문 주택수요 지원 필요
- '건축산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정책추진을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젊은 건축가들의 활동기반을 마련해 주고 해외 전문인력 수출을 위한 지원제도를 정비할 필요
- '창조적 장소 만들기'를 위한 정책추진을 위해 중소도시의 사람과 도시산업을 통한 공간창조 지원방안 마련 필요
- '통일대비 국토비전' 관련 정책추진을 위해 지적, 건축, 인프라 등 통일부 외의 영역에 대한 지원방안 발굴

제2차 국토환경디자인분과회의(2014. 03. 06.)에서는 1차에 이어 3기 국건위 정책방향에 대한 분과차원의 중점 논의 이슈를 선정하기 위한 토론과 분과별 과제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복한 부동산 실현' 정책추진을 위해 청년주거, 노후주거지역 관리, 공동주택지역 등의 공동체 회복, 저층고밀의 중산간 중소도시의 개발, 공동체 내 생활권의 공공스페이스 발굴 등이 필요
- '건축산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정책추진을 위해 도시건축 해외수출방안과 동네 · 마을의 소규모 시공 및 마을건축가 양성방안이 필요하며 다양한 수요기반에 대응하는 소규모마켓을 활성화하여 이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
- '창조적 장소 만들기' 정책추진을 위해 공간문화를 향유하고 공간자산을 업그레이드 하려는 시도가 중요
- '통일대비 국토비전' 정책추진을 위해 기존의 통일부가 해 왔던 영역 외에 건축과 인프라 등 국토도시환경 영역에 대한 지원방안 발굴 필요

제3차 국토환경디자인분과회의(2014. 04. 08.)에서는 국토환경디자인분과의 4대 추진과제에 대한 안건을 확정하였으며, 당초의 3+1(행복한 부동산 실현, 새로운 일자리 창출, 창조적 공간만들기+통일대비 국토비전) 과제의 정책방향을 설정하였고 타 분과과제 및 관련 제도 · 정책의 연계방향을 정리하였다.

- '행복한 부동산 실현' 정책과제 추진을 위해 맞춤형 건축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시원 환경개선, 노후주거지역 관리, 소단위 임대주택 공급방안 등 소외계층 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건축중심으로 접근
-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정책과제 추진을 위해 건축산업의 고도화와 다변화가 필요하며 건축산업의 다변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상품의 다품종 소량화를 유도하여 건축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등 제도적 지원검토가 필요. 또한, 건축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해외건설 진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ODA 사업을 통한 해외진출 기반 구축 전략을 발굴
- '창조적 공간만들기' 정책과제 추진을 위해 건축자산의 고부가가치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을 발주할 때 건축기획단계 검토를 추가하는 등 전반적인 공공건축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

제4차 국토환경디자인분과회의(2014. 07. 31.)는 건축(건설) 분야 직무능력표준(NCS)의 합리적 개발에 대한 논의로 시작했다.

건설분야 NCS 대분류를 보면 '건설'이 토목, 건축, 조경, 도시 · 교통 등 8개의 중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하위에 26개 소분류, 102개 세분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건축, 조경, 도시 · 교통 등 3개의 중분류를 중심으로 세분류 체계의 부적합성(건설과 건축의 분류 위계, 과도한 분리로 업종간 통합적 접근이 어려워지는 점) 등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여 고용노동부 등에 문제를 제기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토분과의 5개 과제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3개의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과제별 내용을 검토하여 연구용역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선정된 과제명은 다음과 같다.

- 소외계층 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 개발
-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유형 다변화
- 공공건축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고부가가치 공공공간 창출

제5차 국토환경디자인분과회의(2014. 10. 10.)에서는 국토 분과 담당과제별 용역추진과 콘퍼런스에 대한 추진방안을 확정하였다.

콘퍼런스를 추진하는 정책과제에 대해 담당위원이 주축이 되어 콘퍼런스 발제자 및 토론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하였고 별도로 과제별 추진회의를 갖기로 하였다.

또한 지난 4차회의 때 논의했던 국가직무표준(NCS)에 대해서는 NCS 결과물을 입수하는 대로 전체 국건위원들이 자료를 공유하고 의견수렴 후 국건위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주된 요지는 건축(도시) 관련 NCS 중분류 등 직업분류체계와 자격증 신설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최초 상정된 안건에는 없었지만 감리공영제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하였으며 몇몇 위원은 감리공영제 법안에 대해 개인재산권 행사를 제약할 수 있는 위헌 소지가 있으며 건축주의 이중부담 문제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3. 건축문화진흥분과회의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건축문화진흥분과회의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초 건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문 건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운영에 관한 사항
4) 건축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5) 건축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수 설계기법의 연구 지원 및 첨단기술의 개발 지원 사항 등

제3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총 6회의 건축문화진흥분과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건축문화진흥분과회의에서 논의한 안건은 〈표 7〉과 같다.

〈표 7〉 제3기 국건위 건축문화진흥분과회의

회차	일시	장소	주요 내용(안건 등)
제1차	2014. 02. 27.	서울(종로) 국건위 회의실	• 건축문화진흥분과 과제도출 • 연구용역 추진현황
제2차	2014. 03. 03.	서울(종로) 국건위 회의실	•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공모내용 브리핑 • 분과 과제선정 및 위원별 분장
제3차	2014. 08. 01.	서울(종로) 국건위 회의실	• 연구용역 추진과제 결정 • 정책 콘퍼런스 주제 논의
제4차	2014. 10. 10.	서울(종로) 국건위 회의실	• 정책 콘퍼런스 추진 세부사항 결정 • 연구용역 추진 및 과업수행자 논의
제5차	2015. 06. 26.	서울(종로) 국건위 회의실	•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문화융성 분야 자문 • 부처별 건축문화 관련 추진사업 현안논의
제6차	2015. 08. 10.	서울(종로) 국건위 회의실	•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문화융성 분야 자문 • 부처별 건축문화 관련 추진사업 현안논의

제1차 건축문화진흥분과회의(2014. 02. 27.)에서는 3기 위원회에서 건축문화진흥분과의 중점추진과제를 도출하는 논의와 연구용역 추진현황 보고 등 기타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분과추진과제 도출과 관련하여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위 건축자산의 활용이 아닌 지역적 · 공간적 매핑을 이용한 도시융합공간 및 연계자원으로서의 정책방향 제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의 유휴건축자산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조성 추진
- 건축문화 기반의 근린재생사업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 건축서비스산업 인력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국내 건축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책을 포함하여 현 해외진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 필요
- 회의 당시 국회 입법진행 중인 한옥 관련 법령 및 동탄신도시 한옥마을 등 추진경과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미래지향적인 빅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한국적 장소에 대한 브랜드 확산사업 추진
-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건립 예정인 국립 건축도시박물관의 콘텐츠 구성을 논의하는 등 설립 지원
- 용도가 쇠퇴한 고층아파트나 오피스 저층부를 창조적 문화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개선방안 도출

제2차 건축문화진흥분과회의(2014. 03. 03.)에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서수정 박사가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공모내역에 대해 브리핑하였고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정의와 공모의의, 지원내용, 사후절차 등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추진과제를 재논의하였다.

또한, 분과위원회의 과제와 위원별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해 전담위원을 지명하여 효과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장하였다.

제3차 건축문화진흥분과회의(2014. 08. 01.)에서는 국건위 분과위 및 연석회의를 거쳐 결정된 13개 과제 중 건축문화분과에서 추진할 3개의 연구용역 추진과제를 결정하였고 각각의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2014년 11월 개최 예정인 국건위 정책 콘퍼런스에서 발제할 주제 발굴회의가 이어졌으며

이날 논의에서는 '한국적 공간 브랜드의 지속적 개발 및 확산전략'을 주제로 인문학 또는 사회문화학 관련 전문가 발표, 한옥이 한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정책제시, 한국 정원의 문화회복 및 융성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김지민, 박찬용 위원이 주축이 되어 콘퍼런스의 내용을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차기회의에서는 콘퍼런스 강연자 선정 및 주제내용의 용역화 여부 검토 등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제4차 건축문화진흥분과회의(2014. 10. 10.)에서는 2014년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콘퍼런스 과제 및 용역과제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콘퍼런스 과제 중 '한국적 공간 브랜드 개발 및 확산전략 마련' 과제는 김지민 위원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3명의 발표자가 한옥 등 한국적 공간브랜드 확산전략에 대한 기술적, 정책적 제안과 한국정원의 역할에 대해 각각 발표하고 패널토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논의되었고, '농어촌 정주성 향상을 위한 공간환경 조성' 과제는 콘퍼런스에서는 제외하되 연구용역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용역추진은 시급성을 고려하여 10월 내 발주 공고하고 착수보고회를 11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제5차 건축문화진흥분과회의(2015. 06. 26.)에서 논의된 안건은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중 '건축문화 융성' 분야의 분과위원회 차원의 정책자문 및 아이디어 제시였으며, 이미 추진 중인 '건축문화융성' 정책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분과위원회의 정책자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와 문체부 등 부처별 사업대상 브레인스토밍을 거친 개선사항과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부처별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개선사항 논의를 위한 회의를 차후에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제6차 건축문화진흥분과회의(2015. 08. 10.)에서는 지난 5차 회의에 이어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건축문화융성' 분야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정부부처별 관련 사업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하여 국건위는 건축정책기본계획 심의기능을 가지고 있는바,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과정 중 '건축문화융성' 분야와 관련된 내용은 국건위의 건축문화진흥분과와

의 정책적 소통과 공유가 필요

- 한옥의 현대화 및 세계화를 위해 한옥 등 한국건축에 대한 철학이 발현되어 한국의 브랜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의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하고 한옥 정책 추진 시 건축뿐만 아니라 도시와 조경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정책을 통한 한국적 브랜드로 발전 유도
- 국토교통부의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정체성과 투명성 등 안전장치로 인해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홍보강화와 확산방법 강구가 필요하며 특히 농림부 소관 마을 만들기 사업 등 '농어촌 경관 및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건축과 조경이 조화로울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의 건축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관광개발과 경관훼손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과제를 추진하여 건축문화경관 진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제 4 절 | 건축 5단체장 간담회

1. 추진 배경

국건위와 건축 관련 단체장이 정기적으로(2개월 단위) 만나 국가건축정책 전반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 · 논의하고, 건축 단체들의 상호 협조를 도모하기 위한 간담회로 제2기 국건위에서 처음으로 개최(2013. 05. 22)되어 제3기 국건위에서도 지속 추진되어 왔다.

건축 5단체는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이고, 국건위에서는 위원장과 3개 분과위원장, 그리고 기획단장이 참석하였다.

2. 추진경과

제3기 국건위에서는 2014년 5회, 2015년 4회 총 9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건축과 관련된 현안사항을 의제로 정하여 중점토론을 실시하였고, 단체별 행사 및 협조 요청 사항을 공유하였다.

3. 성과 및 의의

건축 5단체 간담회에서는 국건위 위원장과 국건위 기획단장을 겸하고 있는 국토부 건축정책관이 참여하여, 건축 관련 현안에 대한 민간의 의견을 직접 듣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국가건축위원회 안건으로 삼아서 논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건축정책에 대해서도 건축 5단체에 국토부 건축정책관이 직접 설명하면서 정책을 알려 시행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건축 5단체 간담회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시행함으로써 건축계의 현안에 대해 공공이나 민간 한쪽의 시각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고, 정부 입장에서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를 국건위에서 권고함으로써 정책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제3기 위원회에서는 학계 및 건축서비스업계와의 간담회에 한정되어 그 대상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차기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

PART 3

제 3 장
위원회 활동사항

제1절 ▶ 2014 건축정책 콘퍼런스

제2절 ▶ 2015 건축산업 활성화 포럼

제3절 ▶ 전국순회 건축 · 도시 정책 포럼

제4절 ▶ 시 · 도 건축 및 도시 행정 공무원 워크숍

제5절 ▶ 건축진흥원 추진단 운영

제6절 ▶ 건축정책기본계획 심의

제7절 ▶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선정

제 1 절 | 2014 건축정책 콘퍼런스

1. 추진배경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008년 출범 이후 5년여 동안 국가건축정책의 수립 · 조정 · 지원 역할을 수행하여 건축정책의 제도적,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제1, 2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제1차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건축정책의 기틀 및 건축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기여한 바 있다. 또한, 2013년 새롭게 출범한 제3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문화기반의 창조경제 및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한 건축정책 마련에 힘써 왔다. 건축정책이 국민의 생활에 보다 밀착하여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책입안자는 물론 학계 및 업계, 대중이 함께 우리나라의 건축과 도시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건축정책의 필요성 및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열린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3기 위원회는 '「2014 국가건축정책 콘퍼런스」 국민이 행복한 건축정책'을 개최하여 정부, 학계 및 업계, 일반인을 위한 논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건축과 도시의 미래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화합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2. 추진경과

위원회는 2014년 11월 11일에 국가건축정책 콘퍼런스 추진방침을 수립하고 11월 13일부터 29일까지 각종 홍보활동을 펼쳤다. 주요 홍보활동으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언론사, 건축단체 및 유관기관에 초청장 및 포스터 약 1,400부를 배포하였고, 주요 학 · 협회, 지자체, 공공기

관에 행사홍보를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하였다. 세부적인 홍보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청장 및 포스터 발송(포스터 500부, 초청장 900부)

- 학 · 협회,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단체, 언론사, 건설업계, 대학교(원), 행사 관련 기관

2) 홍보요청 공문발송

- 주요 학회, 협회 : 17곳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새건축사협회, 여성건축가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한국도시설계학회, auric, 한국여성건설인협회, 한국공간환경학회, 한국공공디자인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농촌건축학회, 한국도시계획가협회, 한국건축역사학회)
- 지방자치단체 : 광역 17곳, 기초 74개 시
- 주요 공공기관 : 30곳
  (국토교통부, 문화관광체육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토지주택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택산업연구원, 서울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광주발전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대전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수원시정연구원,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3) 홈페이지 게시 :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새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도시설계학회, auric 등

4) 회원 메일링 서비스 : 대한건축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AURIC

5) 배너광고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홈페이지, AURIC 홈페이지

3. 주요 내용

행사개요

1) 제　목 : 2014 국가건축정책 콘퍼런스
2) 주　제 : 국민이 행복한 건축정책
3) 기　간 : 2014. 11. 28.(금)~11. 29.(토)
4) 장　소 : 국립현대미술관 세미나실 1, 2, 3
5) 주　최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립현대미술관
6) 주　관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기획단,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개회식

정책콘퍼런스 개회식은 2014년 11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세미나실에서 김석철 위원장과 온영태 운영위원의 개회사로 시작하였다. 뒤이어 국립현대미술관장을 대신하여 조진근 팀장이 환영사를 하였으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해성 소장이 축사를 하였다.


▲ 개회사 (김석철 위원장)


▲ 개회사 (온영태 운영위원)



▲ 환영사 (조진근 팀장)



▲ 축사 (제해성 소장)

세션 1 : 생활밀착형 공간복지 실현

1) 발제

개회사를 마치고 곧이어 첫 번째 세션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세션은 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하여 12시 30분까지 진행되었다. 좌장인 국건위 김세용 위원의 소개로 세션이 시작되었으며 서수정 AURI 선임연구위원 등 3명의 발제로 시작하였다,

서수정 AURI 선임연구위원은 '생활밀착형 공간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생활밀착형 공간복지의 개념과 대상에 대해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의 공간복지 조성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생활밀착형 공간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연구센터장은 '사회서비스 수요 · 공급의 지역간 격차와 접근성 논쟁'이라는 주제로 사회서비스의 접근성 논란을 소개하고 보육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의 공간군집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격차에 대한 정책적 접근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김효정 지역문화관광네트워크대표가 '생활밀착형 문화 · 여가시설 확충방안'을 주제로 생활문화 및 여가시설에 대한 정의와 범주를 규명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흐름을 고찰함과 동시에 시설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2) 토론

토론은 좌장인 국건위 김세용 위원과 강인호 한남대 건축학과 교수, 김정곤 LH토지주택연구원 도시재생연구실장, 김홍섭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 이왕건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재훈 단국대 건축학과 교수가 토론에 참여하였다.

주요 토론내용은 특정한 서비스 제공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익명적 공간환경이 더 중요할 수도 있으며 복지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국민 각자가 느낄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정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수요자를 배려한 시설유치가 필요하며 공간적인 접근성 및 편리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서비스의 접근성보다 전달체계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품질제고가 우선이라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다.

세션 1 사진



▲ 발제 1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 발제 2 (박세경 센터장)



▲ 발제 3 (김효정 대표)



▲ 토론

세션 2 : 한국적 공간 브랜드 개발 및 확산 전략

1) 발제

두 번째 세션은 11월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국적 공간브랜드 개발 및 확산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국건위 김지민 위원의 기조발제 이후 3명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기조발제에 나선 김지민 위원의 '한옥이 한국적 공간브랜드로 정착이 가능한가' 하는 화두로 시작하여 한옥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한옥의 확산전략 마련을 위한 새로운 동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김도경 강원대 교수는 한옥에 대한 인식전환 및 저변확대를 위한 기술축적 및 제도개선 등 한옥의 확산전략을 위한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강민 국가한옥센터장은 한옥의 확산전략을 위한 제도 및 정책적 제안이라는 주제로 한옥정책의 선명성을 제고하고 사람 중심의 정책개발과 미래예측, 확장가능성에 대한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신현돈 서안알앤디 조경디자인대표는 한국정원의 국내외 보급활성화와 전략적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적 공간브랜드 개발과 해외의 한국 정원을 소개하였다.

2) 토론

토론은 좌장인 남해경 전북대 건축공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객석과 함께하는 열린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적 공간브랜드의 개발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지속적 추진을 당부하는 의견이 많이 개진되었으며 정부차원의 한옥보급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건의하는 의견도 상당수 제시되었다. 또한 한옥과 한국 정원 등 외부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연계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세션 2 사진



▲ 기조발제 (김지민 위원)



▲ 발제 1 (김도경 교수)



▲ 발제 2 (이강민 센터장)



▲ 발제 3 (신현돈 대표)



▲ 토론



▲ 질의응답

세션 3 :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기획 및 발주프로세스 개선

1) 발제

콘퍼런스 첫째 날의 세 번째 세션은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기획 및 발주프로세스 개선이라는 주제로 오후 4시 20분부터 6시까지 진행되었다. 발제에 나선 차주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장은 공공건축 기획 및 발주프로세스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해 공공건축 총량과 발주물량 현황을 제시하였고, 기획내용에 대한 검토 절차가 없는 발주와 설계경쟁이 없는 발주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원인으로 정부부처 내 기획전담부서가 없으며 설계용역 발주제도의 최소비용 우선주의를 지적하였으며 공공건축을 발주할 때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설계용역 발주제도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정책과제를 결론적으로 제시하여 발제하였다.

2) 토론

세 번째 세션은 토론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좌장인 박인석 명지대 교수의 진행으로 공공건축 기획부실의 문제와 설계발주방식의 문제에 대해 각각 토론하고 종합정리 및 마무리 순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의 패널은 김유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서기관, 박인수 파크이즈 건축사사무소 대표, 안동광 안전행정부 공기업과 서기관, 조영섭 조달청 시설기획과 팀장, 전영훈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 정아선 서울시 건축기획과 주무관, 황학용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사무관이 참석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 학계, 업계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고 공공건축 발주프로세스의 개선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우선 공공건축을 발주할 때 발생하는 기획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중앙부처 간 기획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의견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달청, 공공건축지원센터, 지방정부의 인력・조직 등 기능강화 방안을 검토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설계발주 방식의 문제해결로는 가격입찰 및 PQ 방식 설계용역 발주에서 설계능력 평가를 강화하자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그에 대한 전제로서 설계용역의 가격입찰 제한의 필요성과 설계공모 의무화 확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세션 3 사진



▲ 인사말(이정면 위원)



▲ 발제(차주영 센터장)



▲ 좌장(박인석 교수)



▲ 토론 1



▲ 토론 2



▲ 토론 3

세션 4 : 다양한 수요대응을 위한 주택공급체계 개편

1) 발제

네 번째 세션은 콘퍼런스 둘째 날인 11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다양한 주택 수요 대응을 위한 주택 공급체계 개편이라는 주제로 천현숙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과 권혁삼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우선, 천현숙 박사는 미래 주택수요와 주택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주택시장의 동향과 주거실태를 분석하고 사회경제적 여건과 주택정책의 여건 변화에 따른 미래주택수요와 정책방향의 재정립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미래 주거정책에 대한 주요 이슈를 발표하였다.

뒤이어 권혁삼 박사는 우리 주거문화의 현재와 과제, 그리고 주택 유형별 공급현황을 제시하였고 주택 유형의 다변화 방안에 대해 발제하였다.

2) 토론

토론의 좌장은 국건위 김세용 위원이 맡았으며 발제자 외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오동훈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전남일 가톨릭대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 7명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주택공급 유형의 다변화의 의미가 구조, 형태, 수요 등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필요한 부분은 강화하되 규제완화를 통해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리츠 등을 활용하여 임대주택 건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임대주택 건설과 관리를 구분하여 임대주택 관리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브랜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확대추진하여 주택건설과 기반시설 정비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알렸다.

오동훈 교수는 민간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육성해야 하고 앞으로 1 · 2인 가구, 고령가구의 비중이 커질 것이므로 일본의 콤팩트 주거개발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입

주자의 개별성향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주택공급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전남일 교수는 그동안 주택시장이 규모의 경제와 대규모 개발논리로 진행되었으나 앞으로는 다품종 소량생산체계로 전환되어야 하며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공급 유형을 다변화함으로써 개발자 이익이 아닌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전상인 교수는 주택문제가 주거양극화, 주거복지 등 앞으로 큰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수 있는 중요한 이슈라고 전제하고, 최근 젊은 층이 사회 생활을 시작할 때 가볍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상승했고 이로 인해 부모의 부동산을 바라는 왜곡된 가족관계가 형성된 우리의 주거문화를 개선하는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파트에 대한 비판의 정도가 과하다고 생각되며, 아파트 또한 우리나라의 주택유형으로 정착되었음을 인정하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좌장인 김세용 위원은 우리나라의 도시환경이 매우 고밀도인 상황으로, 이를 고려한 주택유형 개발이 필요하며, 주택공급유형 다변화를 통해 소규모 주택건설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였고, 이와 같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토지주택연구원 등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정책과제와 법제도 개선방안을 발굴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마무리하였다.

세션 4 사진



▲ 발제 1 (천현숙 본부장)



▲ 발제 2 (권혁삼 수석연구원)



▲ 좌장 (김세용 위원)



▲ 토론 1



▲ 토론 2



▲ 질의 응답

세션 5 : 지진 · 기후변화 대비 건축방재 선진화

1) 발제

다섯 번째 세션은 네 번째 세션에 이어 11월 2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지진 · 기후변화 대비 건축방재 선진화에 대한 주제로 국건위 하기주 위원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첫 번째 발제는 정광량 (주)동양구조안전기술 대표가 지진, 바람, 폭설에 의한 재난피해 사례 및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사례를 소개하였고, 일본 및 국내 내진설계 위조 사례 및 개선방안 내용 등 지진 · 기후변화에 따른 건축물 재난피해 사례 및 교훈에 대해 발제하였다.

두 번째 발제로 나선 오상훈 부산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국내 재해발생의 현황을 분석하고 지진 ·

기후변화 대비 건축방재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 발제자인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소규모 건축물 실태 및 개선방안과 건설기술자 인력양성 실태 및 개선방안 등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안전대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하였다.

2) 토론

전체적인 토론의 구성은 정해진 토론자 없이 객석에 초대된 방재 · 구조 관련 전문가와 업계종사자들의 열린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홍성목 서울대 명예교수는 우리 실정에 맞는 방재정책의 수립을 위해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공공시설물 내진 관련 예산집행 활성화 및 지하방수로 등 집중호우 대비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국민안전에 대한 엔지니어들의 각성과 정확한 해법제시를 촉구하였다.

또한, 김의중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은 안전과 관련한 국가예산의 집행은 국민적 공감과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며 특수구조 건축물 기준 및 소규모 건축물 안전기준 등 관련 기준 부문은 범건축계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김영석 해외건설협회 자문위원은 건축물 안전과 관련된 글로벌 수준의 보험 등이 시행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구조안전 분야에 대한 능력을 강화하여 건설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건축물 안전과 관련된 제도의 미비한 부분은 정책적 제도화로, 제도 미이행에 따른 문제는 강력한 처벌과 규제를 통해 국민안전을 담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서규석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은 현행 건축물 인허가제도에 대해 건축심의 과정에서 개략적인 구조계획 검토에 그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과정에서 구조계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건축구조 및 방재 부문에 역량있는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세션 5 사진



▲ 발제 1 (정광량 대표)



▲ 발제 2 (오상훈 교수)



▲ 발제 3 (박홍근 교수)



▲ 좌장 (하기주 위원)



▲ 토론





▲ 질의 응답

세션 6 : 해피차일드 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시설 건축정책

1) 발제

콘퍼런스의 마지막인 여섯 번째 세션은 11월 29일 오후 4시 20분부터 6시까지 진행되었다. 세션의 발제는 해피차일드 환경조성을 위한 보육시설 건축정책 방안이라는 주제로 권영숙 국건위원이 맡았으며 국내 보육시설에 대한 현황진단 및 문제제기에 이어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보육시설 관련 건축정책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보육시설의 건축환경을 제안하였다.

2) 토론

토론의 좌장은 최경숙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회장이 맡았으며 토론 패널로는 이완정 인하대 아동학과 교수, 변소영 Studio Two 대표, 석정호 HOGA Architecture 대표가 참여하였다.

변소영 대표는 보육시설에 대한 전문성 있는 전담부서의 설치가 시급함을 주장하였고 보육시설의 최저 시설기준 설정과 규모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 정책의 효율화와 건축설계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석정호 대표는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 프랑스는 가족 · 유아부에서 제시하는 어린이집 설계지침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는데 반면 우리나라는 보육시설 기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계지침이 없는데 이를 개선해야 한국 어린이집 건축이 발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완정 교수는 어린이집의 지불가능성(affordability)과 접근가능성(accessibility)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건축가들이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개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보육시설 세부기능의 합목적성과 전문 건축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세션 6 사진



▲ 발제 (권영숙 위원)



▲ 좌장 (최경숙 회장)



▲ 토론 1



▲ 토론 2



▲ 토론 3



▲ 질의 응답

4. 성과 및 의의

2014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콘퍼런스는 휴일에 걸쳐 진행된 가운데에서도 건축 및 도시 관련 공무원과 학생, 민간단체, 기타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틀 동안 6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각각의 건축정책 현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열린 행사로 개최되어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인원 집계 현황은 〈표 8〉과 같다.

〈표 8〉 콘퍼런스에 참석한 인원집계 현황

(단위 : 명)

날짜	국건위 위원	발제 및 토론	방명록 기재 (일반 참석자)	국건위 기획단	합계	방명록 미기재
28일	12	20	53	16	101	+약 30 명
29일	4	13	105	16	137	+약 30 명
합계	16	33	158	32	238	+약 60 명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그간의 물리적 공간 중심의 건축정책에서 진일보하여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건축정책이 어떻게 변화되고 국민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지 보다 넓은 시야에서 답을 찾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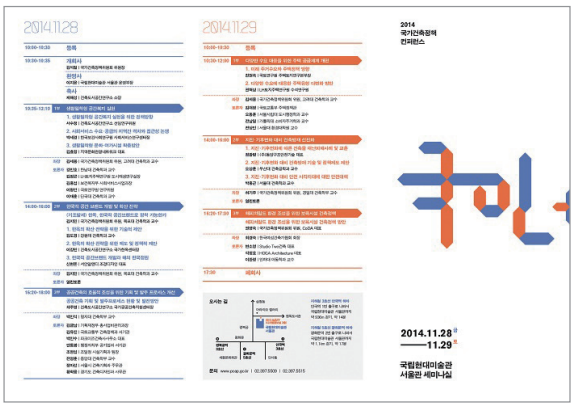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세션별 주제도 개별 건축물에 한정하지 않고 복지, 여성, 보육, 방재 등 사회적인 이슈와 공공 발주, 주택공급 체계, 한국적 공간브랜드 등 경제와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주제로 선정되었으며 콘퍼런스를 통해 활발히 논의된 의견은 제3기 위원회의 건축정책에 방향성과 추진력을 부여하였다.

■ 포스터


2014
국가건축정책
컨퍼런스
2014.11.28 금
——11.29 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세미나실
국민이 행복한
건축정책
Conference
첫째날
11.28
1부 10:35 생활밀착형 공간복지 실현
2부 14:00 한국적 공간 브랜드 개발 및 확산 전략
3부 16:20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기획 및 발주 프로세스 개선
둘째날
11.29
1부 10:30 다양한 수요 대응을 위한 주택 공급체계 개편
2부 14:00 지진·기후변화 대비 건축방재 선진화
3부 16:20 해피저일드 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시설 건축정책
주최
주관
문의
www.pcap.go.kr
02 397 5509

■ 초청장


2014 국가건축정책 컨퍼런스
"국민이 행복한 건축정책"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2014
국가건축정책
컨퍼런스
국민이 행복한
건축정책
Conference
기간 2014. 11. 28(금) ~ 11. 29(토)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세미나실


20141128
20141129
2014
국가건축정책
컨퍼런스
2014.11.28 금
——11.29 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세미나실

■ 행사 세부내용

1) 1일차(11.28.금)

시간	세션주제	콘퍼런스	
		주제 / 발표자	토론자
등록 (10:00~10:30)			
10:00~10:35	개회사	**김석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환영사	**조진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전시기획1팀 팀장)	
	축 사	**제해성**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1부 10:35~12:10	생활밀착형 공간복지 실현	1. 생활밀착형 공간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 **서수정** (AURI 선임연구위원) 2.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지역간 격차와 접근성 논쟁 ■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연구센터장) 3. 생활밀착형 문화·여가시설 확충방안 ■ **김효정** (지역문화관광네트워크 대표)	■ **좌장 : 김세용**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 **토론자** • **강인호** (한남대 건축학과 교수) • **김정곤** (LH토지주택연구원 도시재생연구실장) • **김홍섭**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 • **이왕건**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이재훈** (단국대 건축학과 교수)
점심식사 및 오후 등록 (12:10~14:00)			
2부 14:00~16:00	한국적 공간 브랜드 개발 및 확산전략	(기조발제) 한옥, 한국적 공간브랜드로 정착 가능한가 ■ **김지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목포대 교수) 1. 한옥의 확산 전략을 위한 기술적 제안 ■ **김도경** (강원대 도시건축학부 교수) 2. 한옥의 확산 전략을 위한 제도 및 정책적 제안 ■ **이강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장) 3. 한국적 공간브랜드 개발과 해외 한국정원 ■ **신현돈** (서안알앤디 조경디자인 대표)	■ **좌장 : 남해경** (전북대 건축공학과 교수) ■ **열린토론**
휴식 및 장내정리 (16:00~16:20)			
3부 16:20~18:00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기획 및 발주프로세스 개선	공공건축 기획 및 발주프로세스 현황 및 발전방안 ■ **차주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장)	■ **좌장 : 박인석**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 ■ **토론자** • **김금남**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장) • **김유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서기관) • **박인수** (파크이즈건축사사무소 대표) • **안동광** (안전행정부 공기업과 서기관) • **임헌억** (조달청 시설기획과 팀장) • **전영훈**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 • **정아선** (서울시 건축기획과 주무관) • **황학용**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사무관)

2) 2일차(11.29.토)

시간	세션주제	콘퍼런스	
		주제 / 발표자	토론자
등록 (10:00~10:30)			
1부 10:30~12:00	다양한 수요 대응을 위한 주택 공급 체계 개편	1. 미래 주거수요와 주택정책 방향 ■ **천현숙**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 2.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주택유형 다변화 방안 ■ **권혁삼**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 **좌장 : 김세용**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 **토론자** •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 • **오동훈**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 **전남일** (가톨릭대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점심식사및 오후 등록 (12:10~14:00)			
2부 14:00~16:00	지진 · 기후변화 대비 건축방재 선진화	1. 지진 · 기후변화에 따른 건축물 재난피해 사례 및 교훈 ■ **정광량** ((주)동양구조안전기술 대표) 2. 지진 · 기후변화 대비 건축방재 기술 및 정책제도 제안 ■ **오상훈** (부산대 건축공학과 교수) 3. 지진 · 기후변화 대비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안전대책 ■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 **좌장 : 하기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경일대 건축학부 교수) ■ **열린 토론**
휴식 및 장내정리 (16:00~16:20)			
3부 16:20~17:30	해피차일드 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시설 건축정책	해피차일드 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시설 건축정책 방안 ■ **권영숙**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CoDA 대표)	■ **좌장 : 최경숙**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회장) ■ **토론자** • **이완정** (인하대 아동학과 교수) • **변소영** (Studio Two건축 대표) • **석정호** (HOGA Architecture 대표)
폐회사			

제 2 절 | 2015 건축산업 활성화 포럼

1. 추진배경

제3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 등 건축산업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하여 건축계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건축산업 활성화 포럼」(이하 활성화 포럼)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건축은 국가 인프라와 국민의 삶의 터전을 만드는 산업으로 국내 GDP의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나, 고도 성장기를 지나고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선진국형으로 변하면서 과거와 같은 급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2013년) GDP 내 건설투자 비중은 15% (216조) / 그중 건축이 60% (130조)) 또한, 최근 건축시장의 정체와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인하여 업계의 수익성은 급감하고, 이에 따라 관련 산업의 일자리 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설계 · 시공 등 기존 건축의 업무 영역을 넘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고품질화 · 고부가가치화 등 체질 개선을 통하여 건축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산업과 관련한 모든 분야의 단체 ·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산 · 학 · 연과 공공기관의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활성화 포럼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활성화 포럼에서는 경제 활성화, 신산업 창출에 포커스를 맞추어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전문가 T/F에서 논의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번 활성화포럼은 국건위의 주도로 범부처적인 관점에서 정책 수립이 가능하고, 건축과 관련한 모든 분야(설계, ENG, 시공, 감리)에서 함께 참여하여 시너지 창출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2. 추진경과

포럼은 국건위원과 건축계를 대표하는 산 · 학 · 연 · 관 주요 인사들 중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였다. 그중 국건위원은 김석철 위원장(포럼 의장), 온영태 위원(운영위원장), 박경립 위원, 이승복 위원, 하기주 위원, 이정면 위원, 박소현 위원 등 7명이었고, 외부 인사는 건축계를 대표하여 학회, 협회, 연구원, 공공기관 등에서 해당 기관을 대표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사람을 추천받아 구성하였다.

〈표 9〉 **포럼 위원**

구분	포럼 위원명단	추천기관
학계	김상대(고려대 건축공학과 교수)	대한건축학회
	김회서(단국대 건축학과 교수)	
	신동우(아주대 건축학과 교수)	
	김대익(한경대 건축학부 교수)	
	김도년(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한국도시설계학회
	이정형(중앙대 건축학부 교수)	
업계	이장백(린ENG건축사사무소 대표)	대한건축사협회
	한종률(한국건축가협회 회장)	한국건축가협회
	함인선(BHW 대표, 새건협(전)회장)	새건축사협의회
	김희옥(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서규석(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도상익(아이티엠코퍼레이션 사장)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박인준(이평종합건설 대표)	대한건설협회
	김효균(태조건설 대표)	

구분	포럼 위원명단	추천기관
연구원	김현수(선임소장)	건설기술연구원
	김우영(건설관리연구실장)	건설산업연구원
	유광흠(기획조정실장)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조대연(건설본부장)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공기관	유병열(공공주택본부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SH공사
	이경열(국유재산본부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김승진(녹색건축본부장)	한국시설안전공단

또한, 4개의 전문가 T/F를 운영하였으며, T/F별로 안건을 논의하였다.

〈표 10〉 T/F 구성 및 논의안건

전문가T/F	논의안건
건축 · 도시재생 활성화T/F	신축에 의존한 기존시장을 탈피하고 노후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새로운 건축 시장 창출
녹색건축산업 활성화T/F	녹색건축 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그린 리모델링 건축시장을 창출하고 건축물 에너지 절감정책 추진
미래신시장 창출T/F	4개의 소T/F팀을 운영하여 건축 문화 · 자산 시장과 안전 · 유지관리 시장 창출방안, 해외시장 진출방안 등 논의
건축산업 기반구축T/F	법령 및 제도, 대가, 건축인력양성, 인허가행정 등 건축산업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4개의 전문가 T/F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건축 · 도시재생 활성화T/F

역할	성명	소속 및 지위
자문(정)	박경립	국건위 위원
자문(부)	권영숙	국건위 위원
	박소현	국건위 위원
	이정면	국건위 위원
팀장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과장
간사	조은혜	국토부 건축정책과 사무관

역할	성명	소속 및 지위
팀원	김태곤	세종시 건축과장
	안중직	LH 미래기획단 부장
	권혁례	LH공공주택사업처부장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과 교수
	이선영	서울시립대 건축학과 교수
	김현준	강원대 건축학과 교수
	이광환	해안건축 부사장
	조영수	예지학 대표이사
	현창국	리모델링협회 기술위원장
	차주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 녹색건축산업 활성화T/F

역할	성명	소속 및 지위
자문(정)	이승복	국건위 위원
자문(부)	이정면	국건위 위원
팀장	엄정희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간사	정덕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사무관
팀원	김승진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센터장
	황학용	경기도청 사무관
	이동한	LG하우시스과장(이자지원사업)
	김상훈	KCC과장(이자지원사업)
	서광준	에너지관리공단센터장
	조동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센터장
	박병훈	한국BEMS협회 사무총장
	박진철	중앙대 건축공학과 교수
	이명주	명지대 건축학과 교수
	차정하	(주)써스테라 대표
	이아영	희림건축사무소 부사장
	이상수	(주)소프트벰스 대표

미래신시장 창출T/F

역할	성명	소속 및 지위	비고
자문(정)	하기주	국건위 위원	
자문(부)	김지민	국건위 위원	
팀장	김정희	건축문화경관과장	
간사	김용수	건축문화경관과 사무관	
팀원	남해경	전북대 교수	한옥・건축 자산
	최원철	스튜가 대표	
	이기봉	서울특별시한옥조성팀장	
	심경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안창모	경기대 건축대학원 교수	
	유영찬	KICT 본부장	안전・유지 관리
	이동렬	경일대 건축학부 교수	
	정광량	구조기술사회 부회장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 건축학부 교수	
	이복남	건산연 선임연구위원	
	추승연	경북대 건축학부 교수	
	김 철	솔리데오시스템즈 팀장	첨단기술
	조찬원	빌딩스마트협회 기술연구소장	
	이지은	LH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승재	한국기술교육대 디자인・건축학부 교수	
	김수암	KICT 선임연구위원	
	유기찬	알피종합건축사사무소	
	허나윤	해외건설지원과 사무관	해외건설
	권영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이 강	연세대 건축공학과 교수	
	허경신	해외건설협회지역2실 실장	

● 건축산업 기반구축T/F

역할	성명	소속 및 지위
자문(정)	이정면	국건위 위원
자문(부)	박경립	국건위 위원
	하기주	국건위 위원
	권영숙	국건위 위원
팀장	조한권	국건위 지원팀장
간사	홍성준	국건위지원팀 사무관
팀원	김지엽	아주대 건축학과 교수
	진상윤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이명식	동국대 건축학과 교수
	임남기	동명대 건축공학과 교수
	함인선	새건협(전)회장
	윤혁경	ANU 대표이사
	김성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
	강기호	한국설비기술협회 회장
	김승환	GS 원가혁신 상무
	유광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기조실장
	진경식	서울시 정책기획팀장
	박성남	국건위지원팀 전문위원

3. 주요 내용

전체 포럼은 총 4차례 개최되었다.

발족식 겸 첫 번째 포럼은 2015년 5월 3일 팔레스호텔에서 개최되었으며, 위원 간 소개와 포럼 의장(김석철 국건위원장)의 인사말 이후 AURI에서 「건축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국토부에서 「건축산업 활성화 포럼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위원 간 자유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날 포럼위원 21명 등 총 30명이 참여하였다.





▲ 건축산업 활성화 포럼 (제1차, 2015. 05.)

두 번째 포럼은 7월 3일 건설회관에서 개최되었다. 2차 포럼은 지난 발족식 이후 T/F에서 논의된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포럼의장인 김석철 국건위원장의 개회사 후 '국내 건설시장의 미래 변화 전망과 과제'에 대하여 건설산업연구원의 이홍일 연구위원이 발표하였다. 이후 4개 T/F에서 성과에 대한 발표를 한 후 국건위 온영태 위원의 진행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의장과 포럼 위원 24명 포함 총 40명이 회의에 참석하여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 건축산업 활성화 포럼 (제2차, 2015. 07.)

세 번째 포럼은 8월 28일 건설회관에서 개최되었다. 3차 포럼은 그동안의 포럼과 동일하게 T/F에서 그간의 T/F 성과 발표와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위원들이 발표 내용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새로운 과제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제3차 포럼에는 총 28명이 참석하였다.





▲ 건축산업 활성화 포럼 (제3차, 2015. 08.)

건축산업 활성화 포럼의 성과를 발표하는 공청회는 11월 6일 오후 2시 SETEC(컨벤션홀1)에서 개최되었다. 공청회에서는 발족 이후 6개월간 3차례의 전체 포럼과 약 20회의 전문가 T/F 회의의 결과를 담은 건축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공청회에는 포럼 의장인 김석철 국건위 위원장과 국토부 김진숙 건축정책관을 포함해서 건축계 인사 150명 정도가 참석하였으며, 국토부 김정희 건축문화경관과장이 포럼 활동 경과 보고를 하고, 홍성준 국건위 지원팀 사무관이 「건축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였다. 이후 국건위 온영태 위원이 좌장이 되어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플로어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행사 내용은 〈표 11〉과 같다

〈표 11〉 건축산업 활성화 포럼 행사 내용

시간	주 요 내 용	담당
14:00~14:10	• 개회 및 귀빈 소개	조한권 국건위 지원팀장
14:10~14:15	• 포럼 의장 인사말	김석철 국건위원장
14:15~14:20	• 활성화 포럼 활동 경과 보고	김정희 건축문화경관과장
14:20~15:00	• 주제발표 (건축산업 활성화 방안)	홍성준 국건위지원팀
15:00~15:20	• Tea Break 및 자리 정돈	
15:20~16:10	• 토론 (좌장 : 온영태 국건위 위원) – 토론자 : 김상문(국토부 건축정책과장) 김성홍(시립대), 현창국(리모델링협회), 강재식(건설연), 심경미(AURI), 이지은(LH)	온영태 국건위 위원
16:10~17:00	• 플로어 의견 청취	
17:00	• 폐회	

전문가 토론과 플로어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건설기술연구원의 강재식 박사는 신축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리트로핏 수요에 대응이 필요하며, 국민이 지갑을 열도록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심경미 박사는 한옥과 건축 자산 부문에서는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하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과 산업화를 위한 국민의 호응을 얻기 위해 공공부문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주택토지연구원의 이지은 박사는 3D 프린팅으로 타 산업과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는 동시에, 건축이 확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BIM은 생산성을 높이도록 활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서울시립대의 김성홍 교수는 '건축산업'의 범위가 모호하며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건축산업의 범위 설정과 명확한 현황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리모델링협회의 현창국 기술사는 소규모 건축물 안전검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리모델링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아울러 건축의 품질을 높이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국토부 김상문 과장은 건축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건축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하며, 공공에서의 제도개선과 함께 민간에서도 적극 홍보를 당부하였다. 발표자인 홍성준 사무관은 건축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이 함께 토론하는 장이 마련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플로어에서는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시설안전 · 에너지절감 · 공사계획 · 자금조달 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신기술 도입 외에도 건축설계의 질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의견, 기능공에게도 자격증을 부여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 자가보유율을 높이는 등 국민의 주거고통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 좋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설계 · 엔지니어링 · 시공 등이 함께 발전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좌장인 온영태 위원은 앞으로도 건축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정책에 발전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토론을 마무리하였다.



▲ 건축산업 활성화 포럼 (공청회, 2015. 11.)

4. 성과 및 의의

건축산업 활성화 포럼은 초안은 특정 부처가 아닌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논의의 장을 열고 민간의 제안을 중심으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한 것이라는 데에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제도화하는 등 정책 반영에는 다소 미흡하였으며, 차기 위원회에서는 정책의 실행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제 3 절 | 전국순회 건축 · 도시정책포럼

1. 추진배경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로 공간복지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기후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건축정책개발 필요와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 쇠퇴화와 사회 양극화 심화, 건축문화 가치의 재조명 등 급속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또 다른 건축정책에 대한 변화의 시점에 직면하였다.

이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관계자와 함께 폭넓은 의견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국가건축 · 도시정책을 발굴하고자 권역별로 광역지자체와 함께 지역순회 포럼을 기획하였다.

2. 추진경과

광역지자체 대상으로 건축 · 도시정책포럼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주관기관으로 권역별 5개 광역지자체(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강원도)를 확정하였으며, 지자체와 함께 건축 · 도시정책에 대한 주요 현안과 이슈 중심으로 주제와 발제를 선정하고, 주제별로 위원회 위원과 지자체에

서 추천한 패널과 함께 포럼 참여자를 구성하였다.

2015년 상반기에는 포럼 기획 및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7월 14일 수도권(경기도)을 시작으로 동남권(9. 17.), 호남권(10. 2.)을 거쳐 충청권(10. 30.) 포럼에 이어 마지막으로 강원권 포럼(11. 17.)을 끝으로 총 5회에 걸쳐 지역순회 포럼을 개최하였다.

3. 주요 내용

▶ 제1회 수도권 포럼

일시	2015. 7. 14.(화) 14:00~18:00
장소	경기도 문화의전당 (미소도움관 컨벤션센터)
참석	건축사, 민 · 관 · 산 · 학 · 연 관계자 등 190여 명
주관	경기도
주제1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성능개선 대책 (강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좌장) 이승복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박경립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엄정희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 강승구 푸르지오서비스 대표 • 조동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센터장 • 이동훈 대한건축사협회 도시재생 · 리모델링위원장(건축사) • 정동선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
주제2	집합건물 관리 · 운영 내실화 (박근석 LH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좌장) 윤태영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정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 • 김연기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대표 • 김종석 수원시 건축과장 •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장





▲ 2015 제1차 전국순회 건축 · 도시 정책 포럼 (경기도, 2015. 07.)

경기도와 함께한 수도권 포럼에서는 김석철 위원장과 남경필 도지사가 참석하였으며, 위원장은 신축건물 제로에너지 빌딩과 기존 건물의 현재 사용에너지를 절반으로 감축해야 하는 중요성을, 남 도지사는 경기도 내 에너지 자립도를 70% 이상 달성하여 국가적으로 향후 원전 7기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좌장인 이승복 국건위 위원은 국가 전체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경기도의 녹색건축 정책의 중요성은 국가 전체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첫 번째 주제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성능개선 대책'과 관련한 법과 규정 등을 검토해 에너지 효율성능 확보가 가능한 신축 건축물에 비해, 기존 건축물은 소요비용이 많이 들고 뚜렷한 대책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였다.

두 번째 주제 '집합건물 관리 · 운영 내실화'와 관련해서는, 각종 분쟁과 그에 따른 민원 제기가 많은 집합건물 관리에 있어 내실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 · 제도적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행정개입이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한계 등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다.

제2회 동남권 포럼

일시	2015. 9. 17.(목) 14:00~18:00
장소	창원대학교 종합교육관 (대강당)
참석	건축사, 민 · 관 · 산 · 학 · 연 관계자 등 250여 명
주관	경상남도
주제1	범죄예방설계(CPTED)의 현재와 미래 (강석진 경상대 건축학과 교수)
토론	• **(좌장) 하기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조영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 조용범 경남건축사회장 • 김철권 부산광역시 디자인지원팀장 • 고성룡 경상대 건축학과 교수 • 조정혜 로뎀의집 관장 • 손원진 함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주제2	건축문화유산 등을 활용한 도시 발전 방안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과 교수)
토론	• (좌장) 김태중 경남대 건축학부 교수 • **김지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심경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 신삼호 U&A건축사사무소 대표 • 이호열 부산대 건축학과 교수 • 유장근 경남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 김기수 동아대 건축학과 교수

두 번째 포럼으로 경상남도와 함께한 포럼에서는 '범죄예방설계와 건축문화유산 활용방안'에 대하여 발제와 논의로 진행되었다.

'범죄예방설계(CPTED)의 현재와 미래' 발제 내용으로는 이웃 관계의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고 인식적 차원에서 불안감이나 강력범죄의 증가가 결합되어 심각성을 야기하고 있으며, 범죄예방설계의 궁극적 목표는 범죄 예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도시재생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등 보다 깊이 있는 사업 시행과 건축가의 창의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예방설계의 시스템이 해법으로 제시되었다.





▲ 2015 제2차 전국순회 건축 · 도시 정책 포럼 (경상남도, 2015. 09.)

특히, 좌장을 맡은 하기주 국건위 위원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정책 방향과 법령 정비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주제인 '건축문화유산 등을 활용한 도시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는 건축문화 유산의 보존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경제성의 원리와 자치단체장의 보존의지가 중요하고, 물리적 가치에 더해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건축문화유산의 아카이브 구축 및 조사 방법 등에 대하여 많은 논의를 하였으며, 대구시 사례 등 지역사례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김지민 국건위 위원은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방법 중 문화의 우수성을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건축문화유산 활용방안과 관련 전문가 육성과 함께 정보 공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제3회 호남권 포럼

일시	2015. 10. 2.(금) 14:00~18:00
장소	전남 담양읍 농협 (대회의실)
참석	건축사, 민 · 관 · 산 · 학 · 연 관계자 등 200여 명
주관	전라남도
주제1	고령화와 단독가구(독거노인) 증가 추세에 따른 주거환경 변화 대응 방안 (오세규 전남대 건축학과 교수)
토론	• (좌장)제해성 아주대 건축학과 교수 •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윤영호 LH 연구원 상임연구위원 • 이민석 전남대 건축학과 교수 • 서수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이동희 순천대 건축학과 교수 • 방길현 전남도청 건축개발과장
주제2	지역산업과 연계한 저에너지 친환경 목조건축물 활성화 방안 (오양기 목포대 건축학과 교수)
토론	• 김지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좌장) • 이승복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엄정희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 최원철 (주)채우림 대표 • 김외정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위원 • 전성규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 박병열 시인공간건축사무소 소장

'고령화와 단독가구(독거노인) 증가 추세에 따른 주거환경 변화 대응 방안' 관련, 고령자 단독가구의 증가, 특히 독거노인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노인 고독사가 늘어나는 등 미래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대비한 새로운 주거환경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단독가구의 사회 · 경제적 특수성, 고령자의 주거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발표하였고, 국내외 고령인 단독가구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과 법제도에 대한 국가별 비교분석이 이루어졌다.

또한, 고령이신 분들의 건강상태, 경제 수준, 주거의식 등에 따른 개인 특성과 사회의 복지환경 수준, 물리적 디자인 기법 등을 고려한 종합적 내용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 2015 제3차 전국순회 건축 · 도시 정책 포럼 (전라남도, 2015. 10.)

두 번째 주제인 '친환경 목조건축물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목조건축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하고, 목재의 생산과 유통구조 재건을 촉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목조건축 클러스터를 조성하자는 의견과 함께, 전체 탄소발생량의 20%가 넘는 건물 분야의 탄소발생량을 저감하기 위한 저탄소 목조건축기술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목조건축물의 단열에 대한 문제점과 고가의 건축비 부담에 따른 단점 등을 보완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였다.

제4회 충청권 포럼

일시	2015. 10. 30.(금) 14:00~18:00
장소	천안 예술의전당
참석	건축사, 민 · 관 · 산 · 학 · 연 관계자 등 200여 명
주관	충청남도
주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전략
발제1	도시재생사업 사례 분석을 통한 사업 추진 범위 설정 (류중석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발제2	도시재생의 참여자들–참여자, 시민대학, 지역대학 (이희원 선문대학교 건축사회환경학부 교수)

토론	• (좌장) 온영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박소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강계숙 ㈜종합건축사사무소 디에스그룹 대표 • 김주진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 박흥균 호서대학교 건축토목환경공학부 교수 • 손동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 이광영 남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최봉문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전략' 주제로 열린 충청권 포럼에서는 류중석 중앙대 교수와 이희원 선문대 교수의 발제와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다.

상도4동 도시재생 기반구축 사례를 들어 지역의 도시재생 기반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다.(공동체 활성화, 젊은 세대의 공동체 참여, 단계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추진조직 강화)

또한 도시재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참여자들(참여자, 시민대학, 지역대학)' 중 도시재생사업 참여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주민이 중심이며, 다양한 참여자들의 연결고리, 지속 가능성, 참여도가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고 강조하였다.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도시재생자원, 조직, 법 · 제도 간 협력체계 구축과 시민대학의 다양한 커리큘럼 기획, 참여자들의 한계 해소를 위해 민 · 관 · 학 · 연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 2015 제4차 전국순회 건축 · 도시 정책 포럼 (충청남도, 2015. 10.)

제5회 강원권 포럼

일시	2015. 11. 17.(화) 14:00~17:30
장소	KBS 춘천방송국 공개홀
참석	건축사, 민 · 관 · 산 · 학 · 연 관계자 등 300여 명
주관	강원도
주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과 건축
발제1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조건 (이정형 중앙대 건축학과 교수)
발제2	강원도 건축과 도시재생 그리고 미래 (추용욱 강원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 **(좌장) 박경립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이정면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 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 김영욱 세종대 건축공학부 교수 • 최혁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주명호 아담건축사사무소 대표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이정형 중앙대 교수는 도시재생의 해외 성공사례 중심 내용의 발제를 추용욱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강원도 내 지역사례와 강원도 도시재생 기반조성 방향 내용의 발제를 하였으며 이어 전문가 토론과 방청객과의 자유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도시의 양적 개발시대에서 질적 성장시대로 전환하고 있으며 패러다임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과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주민주도형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이어진 발제 내용으로는 도시재생 연계 프로젝트 추진과 지역의 정체성 있는 건축물과 도시환경에 대한 보존 및 활용 방안과 역사성을 가진 건축물에 대한 실행체계 구축 등 강원도의 지역 활성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조성 방향을 제시하였다.

무조건적인 개발이 아닌 주거복지까지 생각하는 보수적 접근과 원주민이 이주하지 않고 재정착할



▲ 2015 제5차 전국순회 건축 · 도시 정책 포럼 (강원도, 2015. 11.)

수 있도록 관계법령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도시재생에서 지역 특성의 통합적 분석이 필요하며 물리적인 급속한 변화보다는 사회적 부문의 중시와 장기적으로의 평가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외국 사례 답습보다는 강원도의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4. 성과 및 의의

급속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건축 · 도시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요구와 변화 속에서, 위원회는 지역 순회 포럼을 통하여 지역별로 폭넓은 의견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건축 · 도시정책 진흥 방향을 모색하였다.

수도권 포럼에서는 집합건물과 관련한 모호한 부분에서의 분쟁과 갈등 증가에 따라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며 지자체의 행정개입 필요성 공감 그리고 동남권에서는 건축범죄예방설계(CPTED)에 있어 건축의 본질에서 범죄예방 해법을 찾아보고자 했다.

특히 호남권에서는 고령자 단독가구의 증가, 독거노인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주거환경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에서는 언론사 및 학계에서 많은 관심과 인터뷰 요청이 있었으며, 이는 잠재 수요에 대한 방증으로, 향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자연스럽

게 범부처 차원의 사회적 현안으로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열린 충청권과 강원권 포럼에서 다룬 도시재생은 더 이상 재개발이 아닌 우리 삶을 더 낫게 영위할 수 있는 복지개념으로의 전환과 함께 사람이 중심이 되어 그 지역의 역사성과 특별성을 더해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간 포럼에서 다룬 토론내용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소관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건축 · 도시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건축정책의 진흥방향을 모색하고 발굴 · 제안하여 미래의 지속가능한 국가 건축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제 4 절 | 시 · 도 건축 및 도시행정 공무원 워크숍

1. 추진배경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중앙부처와 지방 간 다양한 건축 · 도시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각 지방의 우수한 건축 · 도시정책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해마다 '시 · 도 건축 및 도시 행정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2015년 9월 3일~4일에 대명 변산리조트에서 개최하였다.

2. 추진경과

워크숍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그 주인공인 17개 광역시 · 도에서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참석자 명단 제출 협조 공문을 발송한 결과 17개 광역시 · 도 모두에서 참석자 명단을 보내와 국건위원 7명과 기획단 직원을 포함해서 총 113명의 참석자 명단이 확정되었다.

〈표 12〉 **워크숍 참석자 수**

(단위 : 명)

계	국건위원	기획단	시 · 도	비고
113(9)	7(2)	13(2)	93(5)	( )은 여성, 총 수에 포함

다만 아쉬운 점은 중앙부처에서 참석자 명단을 보내오지 않은 점이나 이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3. 주요 내용

1박 2일간의 워크숍 일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시간		행사내용
1일차	11:00~12:00	60분	등록 및 숙소배정
	12:00~13:30	90분	점심식사 및 휴식
	13:30~13:40	10분	개회, 위원장 인사말, 행사일정 안내
	13:40~14:00	20분	제2차 국가건축정책 기본계획 소개
	14:00~14:20	20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활동 및 주요 정책 안내
	14:20~14:40	20분	Tea Break
	14:40~17:10	150분	포럼(수요자 중심으로의 건축법 체계개편)
	17:10~17:30	20분	Tea Break
	17:30~18:30	60분	특강 Ⅰ(미술관만들기)
	18:30~19:00	30분	휴식
	19:00~21:00	120분	저녁만찬 및 화합의 마당
	21:00~		휴식 및 취침
2일차	07:30~09:00	90분	아침식사 및 휴식
	09:00~10:00	60분	자치단체 특수시책 소개
	10:00~10:30	30분	Tea Break
	10:30~11:30	60분	특강 Ⅱ(국토부 한옥사업의 사례)
	11:30~11:40	10분	특수시책 발표 시상 및 위원장 강평
	11:40~12:00	20분	숙소정리
	12:00~		점심식사 및 복귀

제2차 국가건축정책 기본계획 소개는 당초 국토부 건축정책과에서 맡기로 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여 국건위 활동과 주요 정책 안내를 포함하여 기획단 홍성준 사무관이 대신 발표하였다.





▲ '수요자 중심으로의 건축법 체계 개편' 포럼(2015. 09.)

포럼은 '수요자 중심으로의 건축법 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진행하던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주관하여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는데 지자체 공무원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어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인 정형민 교수의 '미술관 만들기'라는 주제의 특강을 끝으로 1일차 일정을 마무리하고 친교의 시간인 저녁 만찬이 이어졌다.

2일차에는 자치단체 특수시책발표가 있었으며 그 주요 발표내용과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기관명	제목	발표자		주요 발표내용
		직위/직급	성명	
부산광역시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추진사업	건축주택과/시설5급	박근하	부산-시카고 도시건축 특별전 행사 소개
경기도	경기도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녹색건축팀장/시설5	황학용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목적, 사업개요, 적용기술 및 향후계획 등
강원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주무관/시설6	정명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공공주도의 안전점검 시행
경상남도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분양가격 개선	주무관/시설7	한진희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실 건축비로 투명하게 산정하여 임대사업자의 부당 이득을 차단하고 임차인의 분양 가격을 인하
전라남도	대한민국 한옥 건축박람회	팀장/시설5	유영광	대한민국 한옥박람회의 개요 및 구성, 세부 연출계획 등



▲ 자치단체 특수시책 발표



▲ 수상기관 기념촬영

발표내용에 대한 국건위 위원들의 심사결과 최우수상에는 전남, 우수상에는 강원과 경남, 장려상에는 경기와 부산이 각각 차지했다.

참여자 격려 차원에서 전체 참여기관에 대해 기관 표창을 하였으며, 부상으로 총 150만 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였다.

2일차 마지막 순서로 남해경 전북대 교수의 '국토부 한옥사업의 사례'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으며 지자체 특수시책 발표에 대한 시상과 위원장을 대신하여 온영태 운영위원의 강평으로 1박 2일간의 워크숍을 마무리하였다.

4. 성과 및 의의

2015년 시 · 도 건축 및 도시행정 공무원 워크숍은 정책 공유는 물론 그 정책을 시행하는 공무원 개개인이 얼굴을 맞대고 친교와 소통하는 자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그 중심에서 부처 간, 지방 간 협의 · 조정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널리 알렸다는 데 본 워크숍의 성과와 의의가 있었다.



▲ 특강



▲ '워크숍 참석자 기념촬영

이런 전국 단위의 행사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이 원활해지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일조하게 될 것이다.

제 5 절 | 건축진흥원 추진단 운영

1. 추진배경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 포함)

우리나라 건축산업은 시공 중심으로 성장하여, 건축서비스업의 기반과 성과는 매우 취약하며, 해외건설부문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해외 건축 설계시장 진출은 미미하다.(매출의 2%) 국내에서 고부가가치이며 상징성이 높은 건축물은 외국 건축사가 설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건축서비스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담 사업을 추진하는 건축진흥원 설립의 당위성은 점차 힘을 얻어 가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2013. 6. 4. 제정, 2014. 6. 5. 시행)되어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건축진흥원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2. 추진경과

건축 3단체(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는「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정 후 건축진흥원을 공공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설립 활동을 위하여 건축진흥포럼을 공동으로 창립(2014. 4. 30.)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건축진흥원 예산을 2015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제외되어 최종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다.

건축 3단체는 건축계의 염원인 건축진흥원 설립을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나서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 요구를 받아들여 국건위는 건축진흥원 추진단을 만들어 활동하게 되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진흥원 추진방안을 2014년 10월부터 논의하였으며, 2015년 5월부터 6월 사이 3차례의 준비회의*를 통해 건축진흥원 추진단 활동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 방안이 국건위 전체회의(제5회)에서 심의 의결되어「건축진흥원 추진단」이 국건위의 공식적인 활동으로 추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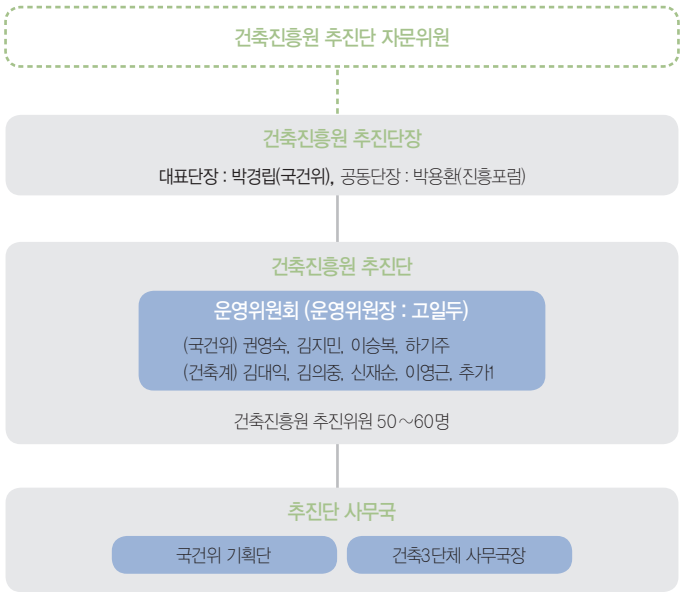
* **(참석자)** 국건위 위원 대표(4인) 및 기획단장, 건축 3단체 임원(부회장급), 건축진흥포럼 대표 및 운영위원장,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

또한 건축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건축진흥원 설립 및 운영방안」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대한건축학회에서 이를 수행하였다.

한편 국토부도 2016년 예산안에 건축진흥원 예산을 다시 요구(20억 원)하여 건축진흥원 설립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3. 주요 내용

국건위와 건축 3단체가 공동으로 활동하는 건축진흥원 추진단은 국건위 정책조정분과위원장인 박



건축진흥원 추진단 조직도

경립 위원이 대표단장을, 건축진흥포럼 박용환 대표가 공동단장을 맡기로 하고, 국건위 위원 4인(김지민, 이승복, 하기주, 권영숙) 및 건축계 6인(고일두, 김대익, 김의중, 신재순, 이영근, 추가 1인)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운영위원장은 건축진흥포럼 고일두 교수가 담당하기로 하였다.

또한 범건축계가 참여하여 추진위원을 구성하고, 건축계 원로들은 자문위원으로서 추진단 활동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추진단 사무국은 국건위 지원팀 및 건축 3단체 사무국장(급)으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건축진흥원은 설립(또는 지정)되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정책 및 제도의 연구 · 조사 · 기획, 실태조사, 정보체계 구축사업,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지원, 창업지원, 출판 및 홍보 사업, 교육 · 연수 사업, 국제 교류 · 협력 사업, 진흥을 위한 기타 사업 등)

추진단은 건축산업에서 민간 비중(85%)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건축이 가진 공공성 등을 감안할 때 공공부문에서 건축 문화와 산업을 선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성을 가진 업무

를 수행하는 건축진흥원은 정책, 연구, 조사,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건축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나, 민간에서는 사업의 공정성과 신뢰도 확보가 어렵다는 점, 건축산업의 특성상 건축진흥원에서는 여러 부처와 업역, 영역을 통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민간에서는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 때문에 공공기관으로서의 건축진흥원 설립을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추진단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5. 7. 10. 건축진흥원 추진단 구성 · 운영(안) 국건위 전체회의 심의
- 2015. 7. 12. 추진단 내부 회의
- 2015. 7. 14. 기획재정부 방문
  - 면담자 : 조봉환(공공정책국장), 신상훈(경영혁신과장), 담당 사무관
  - 방문자 : 박용환(단장), 고일두(운영위원장), 손영진(위원)
- 2015. 7. 21. 추진단 내부 회의
- 2015. 7. 27. 기획재정부 방문
  - 면담자 : 조규홍(경제예산심의관), 류광준(국토예산과장), 담당 사무관 조봉환(공공정책국장), 담당사무관
  - 방문자 : 박경립(단장)
- 2015. 7. 28. 추진단 내부 회의
- 2015. 7. 29. 기획재정부 방문
  - 면담자 : 박춘섭(총괄예산심의관), 류광준(국토예산과장), 담당 사무관
  - 방문자 : 박경립(단장), 김의중(운영위원)
- 2015. 7. 31. 기획재정부 방문
  - 면담자 : 류광준(국토예산과장), 담당 사무관 / 자료전달 : 박춘섭
  - 방문자 : 박용환(단장), 고일두(운영위원장), 하기주(운영위원)
- 2015. 8. 4. 추진단 내부 회의
- 2015. 8. 5. 기획재정부 방문
  - 면담자 : 박춘섭(총괄예산심의관)
  - 방문자 : 고일두(운영위원장)

- 2015. 8. 18. BH 국토교통비서관 면담
  - 면담자 : 이원재(국토교통비서관), 길병우(행정관)
  - 방문자 : 박경립(단장), 권영숙(운영위원), 하기주(운영위원), 김상문(건축정책과장)
- 2015. 8. 28. 추진단 내부 회의
- 2015. 9. 8. 2016 정부 예산안 확정 : 진흥원 설립 예산은 미반영
- 2015. 9. 22. 추진단 내부 회의
- 2015. 12. 4. 추진단 내부 회의 : 추진단 활동 결과를 정리

4. 성과 및 의의

추진단의 활발한 활동과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설립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이견 등으로 건축진흥원 설립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BH의 많은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건축진흥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할 수 있었고, 기존 공공기관이 진흥원으로 지정되면 기존에 수행하던 건축 관련 기능과 건축진흥원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독립된 진흥원으로 발전 가능하며, 이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건축진흥원 추진단은 마지막 회의에서 그간 건축진흥원 추진단에서 논의한 결과와 노력한 사항을 제4기 국건위로 전달하고 건축진흥원과 관련한 논의를 지속할 것을 건의하며, 건축진흥원 추진단 활동 종료 이후에도 건축진흥원 설립과 관련하여 건축계가 함께 노력한다는 것과 향후 건축 3단체에 새로운 회장단이 구성되면 새로운 회장단에도 건축진흥원 설립 사업에 협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활동을 종료하였다.

제 6 절 | 건축정책기본계획 심의

1. 추진배경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다.

이 계획은 건축 관련 산업, 경관, 환경, 에너지,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 계획이자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성과관리를 통해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실천적 계획이며, 과제의 종합적인 검토와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복수 부처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범정부적인 계획이다.

건축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4)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 대책
6)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건축 분야 전문인력의 육성 ·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9)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10) 건축 관련 기술의 개발 · 보급 및 선도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11)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시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진흥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 후 이를 확정하게 된다.

2. 추진경과

2010년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2014)이 수립 · 추진되었다.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아름다운 국토와 쾌적한 삶터를 구현하기 위해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 '건축 · 도시 분야의 녹색성장 기반 구축',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을 3대 목표로 하고, 6개 추진전략과 18개 중점실천과제, 113개 단위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계획 종료 후 성과 점검 결과 113개 단위실천과제 중 108개(95.6%)를 완료하였으며, 미완료된 5개 과제는 2차 계획 및 지역건축기본계획으로 이관하여 실행하기로 하였다.

주요 성과로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해 건축법령 정비, 시범사업 추진 등 정책인프라를 강화, 주거 ·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지원을 추진하여, 「녹색건축법」(2013. 02.), 「도시재생법」(2013. 06.), 「한옥 등 건축자산법」(2014. 06.) 제정, 「경관법」 전부개정(2013. 08.), 「건축서비스법」(2013. 06.), 「방치건축물정비법」(2013. 05.) 등 건축정책 제도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그린리모델시범사업(54건), 도시재생선도사업(13건),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38건) 등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성과홍보 및 확산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건축제도를 규제중심에서 리뉴얼(재건축 및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로 개선, 건축투자를 저해하는 지자체 숨은 규제를 발굴하

여 폐지하였다.

아울러 건물 안전제도를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건축기준을 정비하며 시 · 도에서도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특성과 현안을 고려한 지역건축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제1차 계획 종료 후 제2차 기본계획은 종전의 연구용역 방식이 아닌 국건위, 국토부, 학계, 연구원, 업계 등 60여 개의 건축 관계 단체(102명)가 참여하여 70여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민관합동으로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사전기획 TF (3회)	분과별 TF (55회)	총괄 TF (3회)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개최	국건위 심의안건 상정
2014년 4~5월	6~9월	10, 11월	2015년 3~5월	5월 14일	5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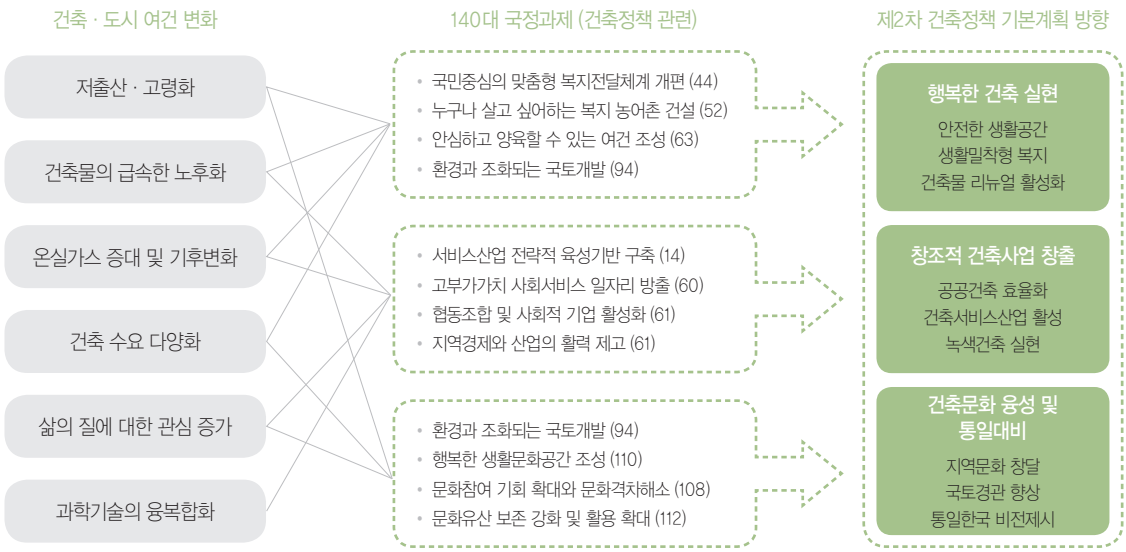
추진 일정

총괄분과(13명)	1분과(62명)	2분과(10명)	3분과(11명)	4분과(10명)
과제 조정	안전 · 방재	공간복지	건축서비스산업	건축문화
건축정책관 관 소속과장 각 분과장	하기주(분과장) 최찬(간사)	박소현(분과장) 전인재(간사)	이정면(분과장) 김유진(간사)	이공희(분과장) 김용수(간사)

분과 구성 및 담당

3. 주요 내용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심의(안)은 건축 · 도시 여건 및 정책수요의 변화와 140대 국정과제 등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기본계획 방향을 수립하였다.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방향 도출

일상공간의 개선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건축서비스산업 체계 개선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건축정책과 건축도시디자인 체계 정비를 통해 지역문화를 육성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 확대 등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건축정책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안전과 행복, 창조와 문화를 이끄는 건축'** 비전 실현을 위한 3개 목표, 9개 추진전략, 26개 실천과제, 73개 단위실천과제를 도출하였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생활공간의 안전성 증진, 생활밀착형 복지공간 체계 구축, 건축물 리뉴얼 촉진 활성화, 공공건축 효율화,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녹색건축 실현, 지역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 국토경관 향상, 통일한국 건축 비전 제시 등이 기대된다. (본 내용은 심의안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최종 계획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제 7 절 | 국토환경디자인 지원 사업 선정

1. 추진배경

「건축기본법」 제2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치단체장은 공공 이익의 증진과 건축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사업, 건축디자인 개선사업 등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으로 지정 및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전략계획 수립 지원 등을 통한 국토경관 개선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38개 사업에 222억 5,900만원을 지원하였다.(2015년까지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2016년부터는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으로 운영)

2. 추진경과

2014년 사업은 제2차 전체회의(2014년 2월)에서 심의하였고, 2015년 사업은 제3차 전체회의(2015년 2월)에서 심의하였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2016년 사업을 당초보다 앞당겨 제6차 전체회의(2015년 12월)에서 심의하였다.

3. 주요 내용

1) 2014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사업의 취지에 맞게 국토환경 디자인 향상의 선도적 모델로 우수한 지자체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시범사업 취지 부합 및 정부지원 사업 파급효과 등을 종합・검토하여 4곳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심의 결과 수원시, 광주광역시, 김천시, 공주시가 선정되었다.

2) 2015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서류 및 현장심사 결과 8개소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국건위 심의를 거쳐 최종 6개 사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심사 과정에서 온영태 국건위 위원이 선정위원장을 맡았으며, 국건위 위원들이 심사위원으로 함께 참여하였다. 심의 결과 논산시, 고양시, 대구 남구, 전남 강진군, 경북 상주시, 경기 광주시 등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3) 2016년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서류 및 현장심사 결과 5개소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국건위 심의를 거쳐 최종 3개 사업 선정하기로 하였다. 심의 결과 경남 밀양시, 인천 옹진군, 경기 시흥시가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었다.

4. 성과 및 의의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은 해당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평가하고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지역에 적합한 환경 디자인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토환경 디자인의 취지에 맞는 예산규모 및 사업의 내실을 기해서 더 발전된 국토환경 디자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국토부, 지자체가 더 한층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

PART 4

제 4 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책제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4가지 원칙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01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건축물과
공간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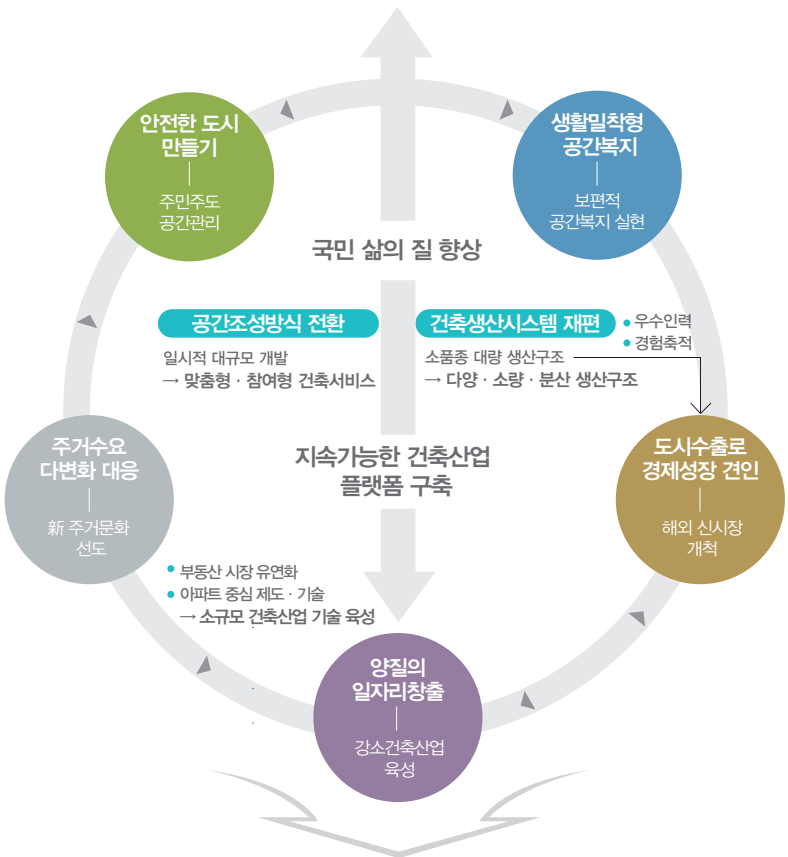
02
국토공간의 효율적
사용과 보존을 위해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정책

03
양질의 건축산업 일자리를
만들고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질 향상을 위해 좋은 일꾼을
양성할 수 있는 정책

04
건축물과 공간환경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야 하는 정책



정책 비전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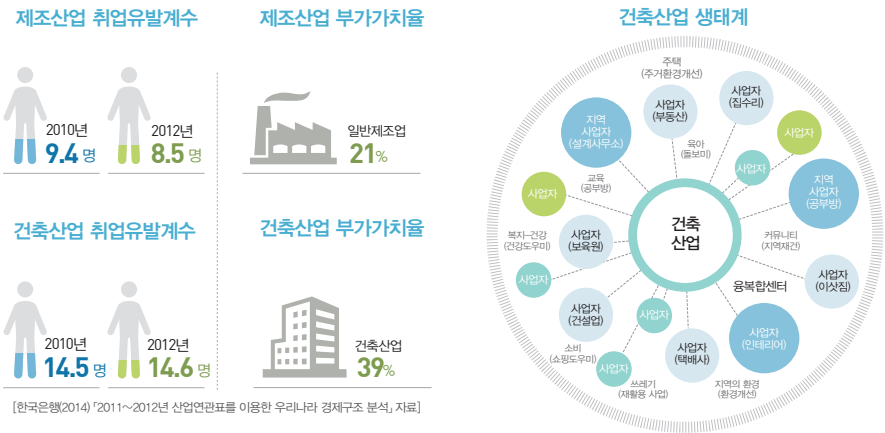
정책제안

01. 소규모 건축서비스산업 가치향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02. 안전한 도시만들기
03. 맞춤형 공간복지 실현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04. 변화하는 국민 삶을 반영하는 새로운 주거문화 선도
05. 도시수출로 경제성장 견인

소규모 건축서비스산업 가치향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창출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은 건축산업을 활용하여 창조경제 실현

건축산업은 부가가치와 취업유발 효과와 높으며 연관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창조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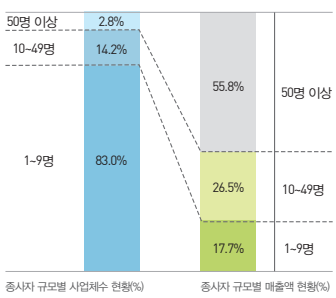


[한국은행(2014) 「2011~2012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우리나라 경제구조 분석」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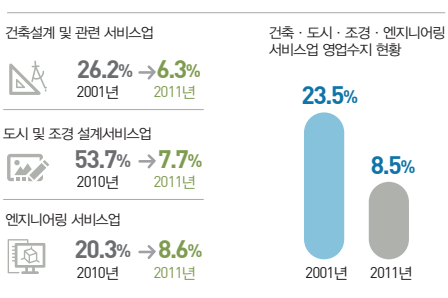
경기침체로 건축산업은 위축되고 대형 건설 · 건축서비스 산업 위주의 불균형 산업 구조 지속

-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수는 1~9명의 소규모 사업체가 82.9%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50명 이상 규모의 사업체 비중은 2.8%에 불과하지만 전체 건축서비스산업 매출액의 55.8%를 차지
- 건설업부문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평균 종사자수는 2007년 2.3명에서 2013년 1.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와 매출액 비교



건축 서비스업 영업수지 현황



[국토교통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5), 통계로 살펴본 건축서비스산업의 현재, 2015 AURI 제1회 건축도시포럼]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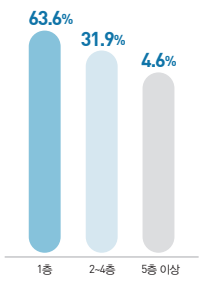
소규모 건축서비스 사업 수요 증가

전체 건축물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건축물과 관련 건축서비스 수요 증가

- 5층 이하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중 97.5% (건축법상 소규모건축물(2층 이하) 비중은 85% 이상)
- 단독주택 재건축 대상(1985년 이전 건축) 전국 35만6천동

소규모 건축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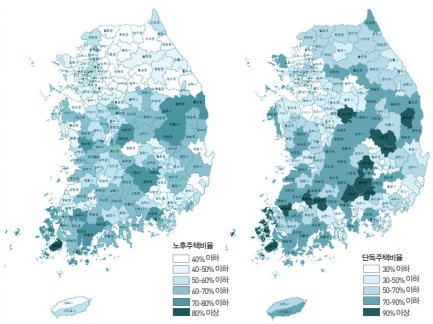
층수별 건축물 현황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5), 지진 기후 변화 대비 건축방재선진화 연구, p.101]

소규모 재건축, 개보수 수요 증가

전국 단독주택 및 노후주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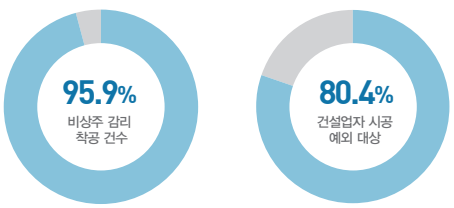
노후도	동수
10년미만	37,766 동
10년~20년	39,369 동
20년~30년	23,927 동
30년~40년	14,072 동
40년~50년	8,182 동
50년이상	7,548 동
합계	130,864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1), 서민 저층주거지 통합적 근린재생 정책방안 연구, p.16]

소규모 건축시장은 저가입찰, 미등기 업체가 공사하는 등 낮은 수준의 기술에 의존

-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요건 : 5억 이상 ⇒ 일부 소규모 건설업체 창업 포기
- 661㎡ 이하 주택 등은 건설업 면허 없이 건축주 직영공사 가능 ⇒ '집장사'가 건축주 명의 빌려 시공

전체 직영공사 착공 건수: 206,721건 中



[국토교통부(2014),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공청회 공개자료, p.7]

낮은 수준의 기술에 의존하는 단독주택 개보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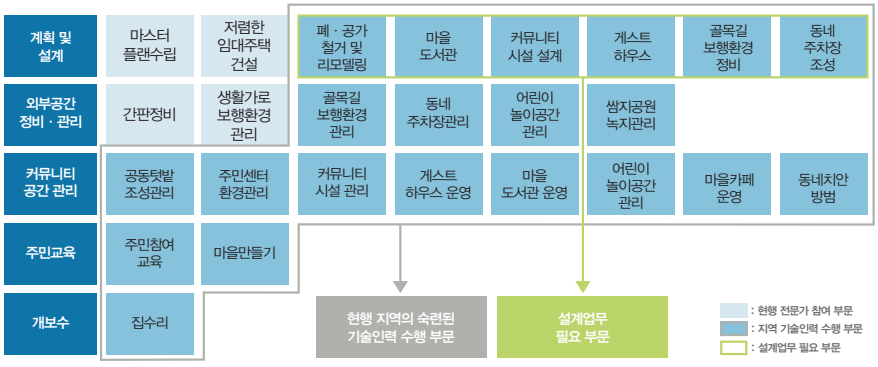


소규모 건축서비스산업 가치향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다품종 소규모 건축수요에 대응하는 양질의 强小 건축산업 육성

마을만들기 및 유휴공간 활용 등 시범사업 확대로 건축서비스 수요 및 공공발주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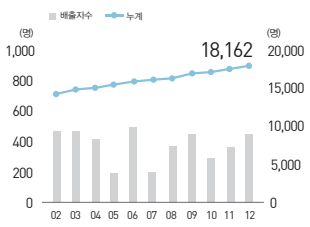
- 마을만들기 11개 지자체 공모사업 총사업비 : 10조 5,228억원 (중앙정부지원 63%)
- 마을단위 소규모 건축서비스산업(쌈지공원, 폐 · 공가 리모델링 등)은 비공식적인 재능기부로 수행하거나 비전문가가 참여하여 품질보장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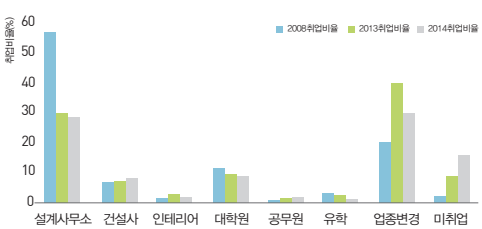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4), 정책여건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건축정책과제 및 추진전략 연구, p.110]

- 비공식적인 일자리를 공식적인 일자리로 전환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 건축사, 건축학과 졸업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건축사무소 및 양질의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전문가가 필요한 지역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므로 건축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에서 전문인력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할 필요
- 지방자치단체 공공발주사업의 질향상을 위한 공공건축가 제도 확산 및 지원 확대 필요
  – 공공발주 사업의 기획과 공간계획을 총괄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예산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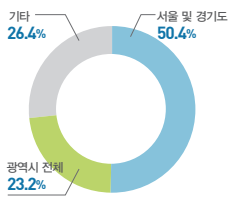
건축사 배출자수 및 누계(매년평균 466명)



건축학과 졸업생 설계사무소 취업률 하락 (2008년 대비 절반)



건축서비스 사업체 분포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4), 정책여건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건축정책과제 및 추진전략 연구, p.111]

다품종 소규모 건축시장에 대응하는 强小 건축산업을 육성하고 창조인력이 일자리가 있는 지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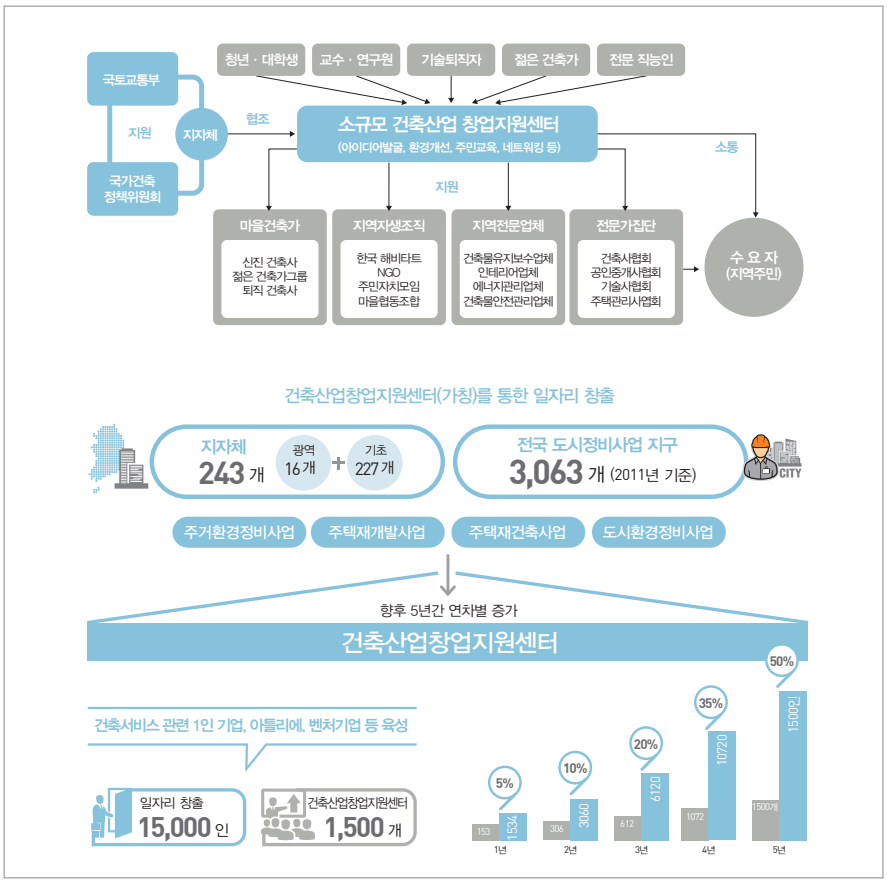
창조적 건축인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및 지원체계 구축

소규모 건축물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도입으로 양질의 건축서비스 산업 육성

- 건축물성능인정제도 도입 : 에너지효율주택, 안전주택 등 건축물 성능향상을 위해 단독주택, 소규모 오피스 · 상업건축물 건설자금 지원(철거비 · 설계비 · 공사비 저리융자 등 일부 지원)
- 소규모 건축서비스산업 관련업체 법인세 감면으로 신규 창업인력 유도

지방자치단체에 건축산업창업지원센터를 설치(국가건축정책위원회 지원)

- 창조적 건축산업 인력들이 적절한 일자리에 배치될 수 있도록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제도 · 기술정보 제공과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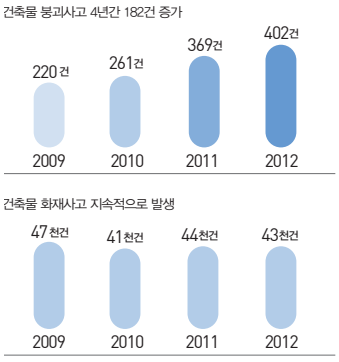


안전한 도시만들기

지속적인 건축물 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및 재난 피해 증가

건축물 안전강화대책(지난 10년간 37차례)에도 불구, 붕괴 · 화재 등 안전사고 지속적으로 발생

건축물 붕괴 · 화재사고 발생건수



[국토교통부(2014),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공청회 공개자료, p.1]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사고 (2015.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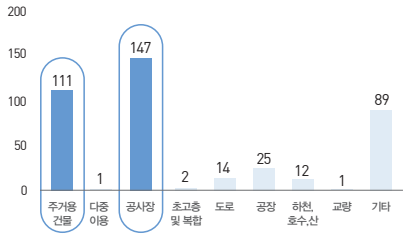


[아산 오피스텔 붕괴(2014.5.12)]

최근 소규모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등과 관련된 안전사고 발생 다수

- 해마다 구조물 붕괴건수는 증가하며 대부분 소규모 건축물과 관련된 붕괴사고 발생

2012년도 장소별 붕괴사고 발생현황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5), 지진 기후변화 대비 건축방재 선진화 연구, p.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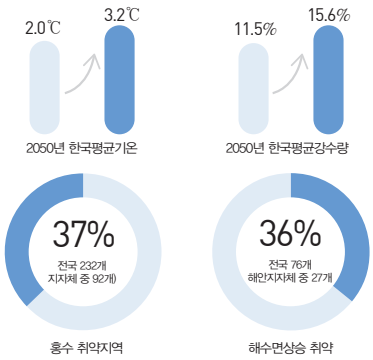
추진배경

재난 · 재해 및 생활안전에 취약한 지역의 안전성 확보 시급

특히 소방도로가 부족한 소규모 주거지 밀집지역 등은 재난 · 재해 및 사고 대응에 취약한 도시구조

- 재해규모 증가에 비해 방재시설 확대가 어렵고 저류공간 축소, 불투수 면적 증가 등 도시방재 어려움

기후변화와 방재환경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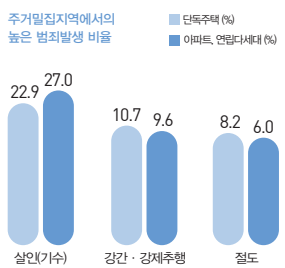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기반이 미흡한 교통안전, 범죄안전 취약지역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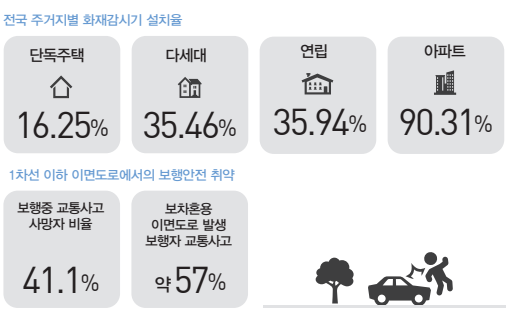
- 전체 범죄의 약 30%가 건축물에서 발생하며 주거지에서 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상황
- 최근 교통사고 발생률은 감소하였으나 기성시가지에서 보행자의 교통안전은 여전히 위험한 수준

범죄안전에 취약한 주거지



[경찰청 범죄발생장소통계(2011년 ~ 2012년)]

단독 ·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화재사고 취약



안전한 도시만들기

안전한 건축물 생산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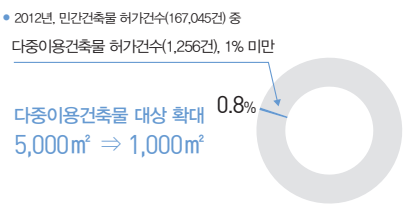
대형 건축물 안전에 집중되었던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주변지역과 소규모 건축물 안전 강화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제도 입법]** 초고층 · 대형 건축물에 대한 구조, 인접대지 안전성 영향평가
- **[소규모 건축물 안전체계 개선]** 소규모 건축물 구조확인 대상 확대 및 현장책임자 지정
- **[다중이용 및 특수구조 건축물 기준 개선]** 다중이용건축물 대상 확대 및 특수구조건축물 기준 마련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



다중이용 · 특수구조 건축물 기준 개선



- 특수구조건축물의 용어정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개정)
- 유지관리계획서 제출 및 관리 (건축법 시행령 제23조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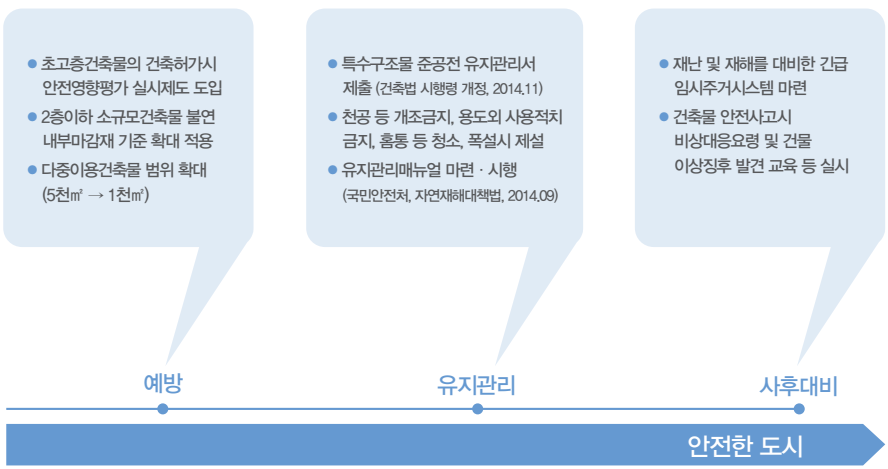
※ 건축법 시행령 제23조 2항: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유지 · 관리하는 경우 건축물의 제설(除雪), 홈통 청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유지관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소규모 건축물 구조안전확인 필요

소규모 건축물의 법적 규정

구분	건축신고			건축허가	
적용범위	소규모 건축물 (3층 미만, 연면적 1,000㎡ 미만)			3층~5층	6층 이상
	기타	200㎡ 이하	200㎡~1,000㎡		
설계도작성	의무대상×	건축사			
구조계산서 구조도	의무대상×			건축사 등 (내진설계 포함)	구조기술사 (내진설계 포함)

예방(사전 설계단계) ⟹ 유지관리 ⟹ 사후대비 단계별 안전로드맵 수립



건축물 및 도시만들기 과정에서 예방 · 유지관리 · 사후대책의 단계별 안전대책 마련

공간계획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안전 확보계획 수립

부처별로 진행되는 안전공간 만들기 사업을 장소중심의 종합적인 계획으로 발전

- 공간계획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방재 · 안전도시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 안전이 취약한 소규모 건축물 밀집지역에 주민참여 피난거점 조성 및 재원 확보
- 안전체험관 건립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방재 및 안전 교육을 통한 주민 주도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주민주도의 안전마을 만들기를 유도하기 위한 협정제도 운영 지원

- 건축협정 · 경관협정 제도를 활용하여 안심마을 조성을 고려한 공간계획을 수립할 경우 계획 수립비 및 코디네이터 지원

재난 및 재해에 대비한 긴급 임시주거시스템 마련

긴급 임시주거시스템 마련

- 평소 지역거점으로 활용되는 사회서비스시설을 사고발생시 응급주거단지로 활용
- 전기 ·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사전에 구축하고 임시주거표준유형 개발 및 보급
- 원전시설 및 위험시설 주변 안전취약 지역에 방재공간 조성 정책 수립



[국토교통부(2014), 재난재해대비 임시거주공간 시스템 개발 최종보고서]



[IKEA refugee shelter system]



[일본 핵피난소]

맞춤형 공간복지 실현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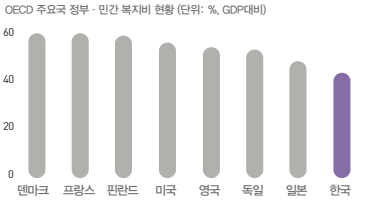
공간복지의 질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

공간복지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소

- 안정적인 경제성장시기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구조에 대응하여 정책 새로운 복지 도입 필요
  – 공장, 플랜트, 도로 등 산업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에서 공원 · 녹지 · 복지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를 확충하는 정책으로 전환

국가경쟁력의 척도인 공간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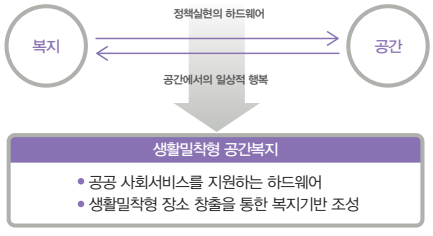
- 경제성장의 부수적 효과로서 복지시설을 수혜적으로 분배하는 시대에서 공간복지 실현 자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로 전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2015), 선진국의 정부와 사회 복지 지출의 실제 수준 보고서]

복지실현의 기반인 공간복지

- 생활밀착형 공간복지 : 일상생활에서 쉽게 갈 수 있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복지, 의료, 교육, 주거, 문화 시설등 물리적 공간을 의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기초생활인프라"란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지역활력을 위한 중앙정부공모사업에 생활밀착형 사회서비스시설 조성계획 증가

구분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취약지역 개선
사업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문화도시 · 문화마을 시범사업	도시재생선도사업 (근린재생형)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주관부처	농림축산 식품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지역발전위원회
목적	농촌사회 유지도모	지역부존자원활용, 환경 및 소득기반 조성	지자체 스스로의 발전유도	문화바탕 도시와 마을의 장소가치 재창조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문화, 복지, 교육, 의료시설 확충과 공동체활성화 도모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안전이나 위생이 취약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
공간복지 관련사업	기초생활 환경정비, 경관개선	생활환경조성, 복합생활공간 조성	주거지 및 중심시가지 재생, 기초생활기반 확충	문화적 장소 및 시설인프라 구축	주민커뮤니티공간 마련, 영유아 및 독거노인 보호시설 확충, 도서관, 체력증진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긴급집수리, 안전 · 방재시설 확충,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일자리 · 문화 · 복지및 주민소득사업을 지원하고 커뮤니티활성화에 필요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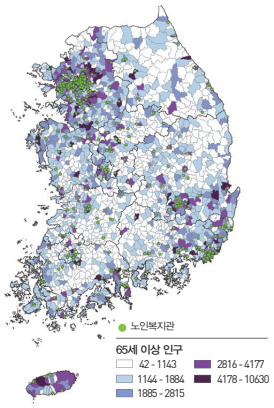
추진배경

맞춤형 공간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

인구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공간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정책 미흡

-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고령자 여가생활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고령자 복지시설 공급은 지역별로 편차
- 국민소득수준 향상으로 국민의 문화 · 여가시설 충족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부족 ⇒ 생활권 단위에서 공간복지 수급 불균형과 도시 · 농촌간 격차 심화

노인인구 대비 노인복지관 분포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5),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복지 실현 및 공공건축 조성 정책방안 연구, p. 53]

- 인구규모와 주민의 연령 · 계층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공급한 결과 수요자 측면에서 도시 · 농촌 간 문화 · 사회서비스시설 공급의 불균형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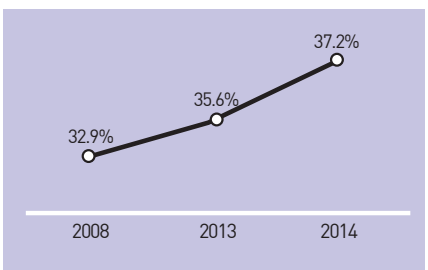
인구 10만명당 문화시설 수와 문화시설 1개당 평균 서비스 인구
(2013년 12월 기준)

구분	인구수	문화시설 수	인구 10만명당 문화시설 수(개)	문화시설 1개당 서비스 인구(명)
서울 종로구	156,645	57	3.65	2,748
서울 송파구	665,271	14	2.11	47,519
경기 용인시	965,345	33	3.41	29,252
강원 태백시	48,095	7	14.5	6,870
강원 영월군	40,221	28	70	1,436
경북 울릉군	10,231	4	40	2,557
인천 옹진군	20,685	1	5	20,6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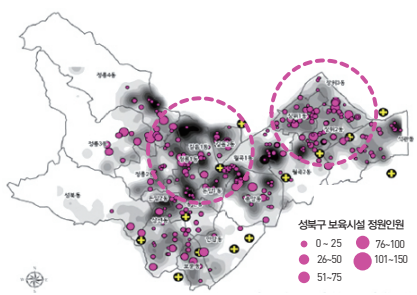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5),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복지 실현 및 공공건축 조성 정책방안 연구, p. 59]

- 맞벌이 부부 비율 증가에 따른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수요 증가
  ⇒ 미취학 아동인구가 밀집한 주거지역과 국공립 보육시설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 다수

맞벌이 부부 비율 증가 추이



생활권 단위 보육시설 수요공급 불일치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5),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복지 실현 및 공공건축 조성 정책방안 연구, p. 24,52]

맞춤형 공간복지 실현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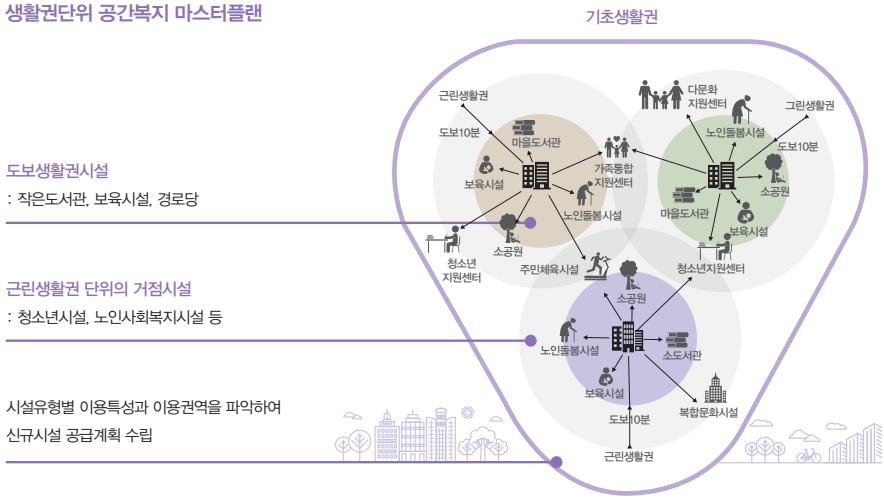
생활밀착형 공간복지 마스터플랜 수립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적정한 시설을 공급하는 맞춤형 공간복지 실현

- 부처별로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및 주거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사회서비스 시설 수요를 생활권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필요한 곳에 서비스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3차원 공간계획 수립

수요 · 공급 조사	도보권 공간배치	3차원 공간계획
• 인구가구계층에 따른 수요 파악 • 생활권 내 사회서비스시설 공급현황	• 생활권단위로 필요 시설 구분 • 도보권에 필요한 시설 배치	• 생활권 단위의 사회서비스 시설 수급관리계획

생활권단위 공간복지 마스터플랜



도보생활권시설
: 작은도서관, 보육시설, 경로당

근린생활권 단위의 거점시설
: 청소년시설, 노인사회복지시설 등

시설유형별 이용특성과 이용권역을 파악하여 신규시설 공급계획 수립

생활밀착형 공간복지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제도개선

- 도시 · 군 기본계획의 부문계획으로 생활권단위 공간복지 마스터플랜 수립 의무화 : 도시 · 군 기본계획 수립지침(제13절 생활권계획 4-13-3 작성원칙) 및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기준 개정
- 2년 단위로 사회서비스 시설 수급 실태조사 의무화 :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 19조의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 개정
-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제1장 총칙의 제3조 관리대상 사업 선정 등): 신규 사회서비스시설 확충시 생활밀착형 공간복지 마스터플랜 참조하도록 반영

모든 세대와 계층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맞춤형 공간복지

생활밀착형 공간복지 실현을 위한 지역자산 활용형 거점 마련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서비스시설 공급

- 기능쇠퇴 노후상가 및 공가, 유휴공공자산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
- 재건축 대상 공공건축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시설을 복합한 건물로 재생
- 전국적으로 도보생활권안에 설치된 경로당을 활용하여 고령자를 위한 복합적인 문화복지거점 조성

도심 내 유휴공간 활용

폐교	전국 공가	미활용 국유토지	전통시장 빈점포
3,500개	80만호	77%	10%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4), 정책여건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건축정책과제 및 추진전략 연구, p.83]

재건축 대상 공공건축 활용

30년 이상 된 행정자산(건축물)

8,789동, 약 774ha

자산규모 36조원

[기획재정부(2014), 국유지 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p.61]

경로당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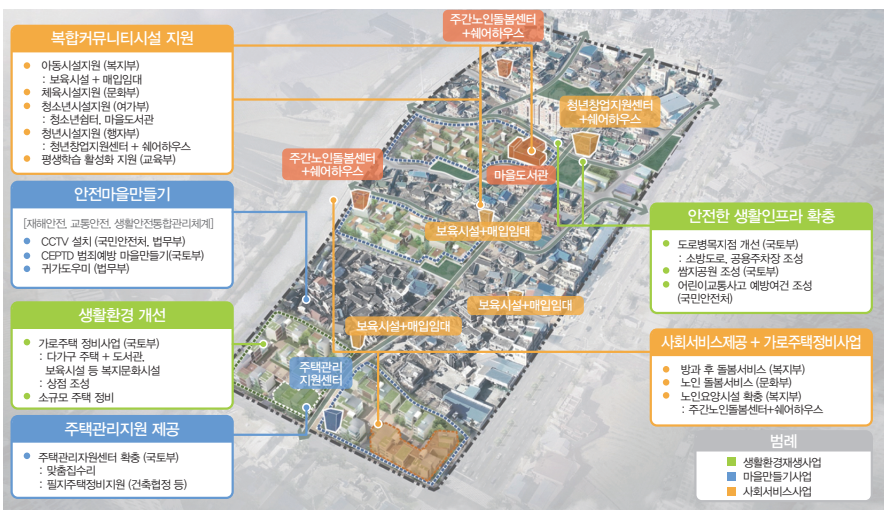
노인인구(65세이상) 6,250,986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319	63,251	1,413

[보건복지부(2014), 노인복지시설현황]

지역자산 활용형 공간복지 시범사업 추진

- 마을 여건에 따라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통합한 복지거점 조성 시범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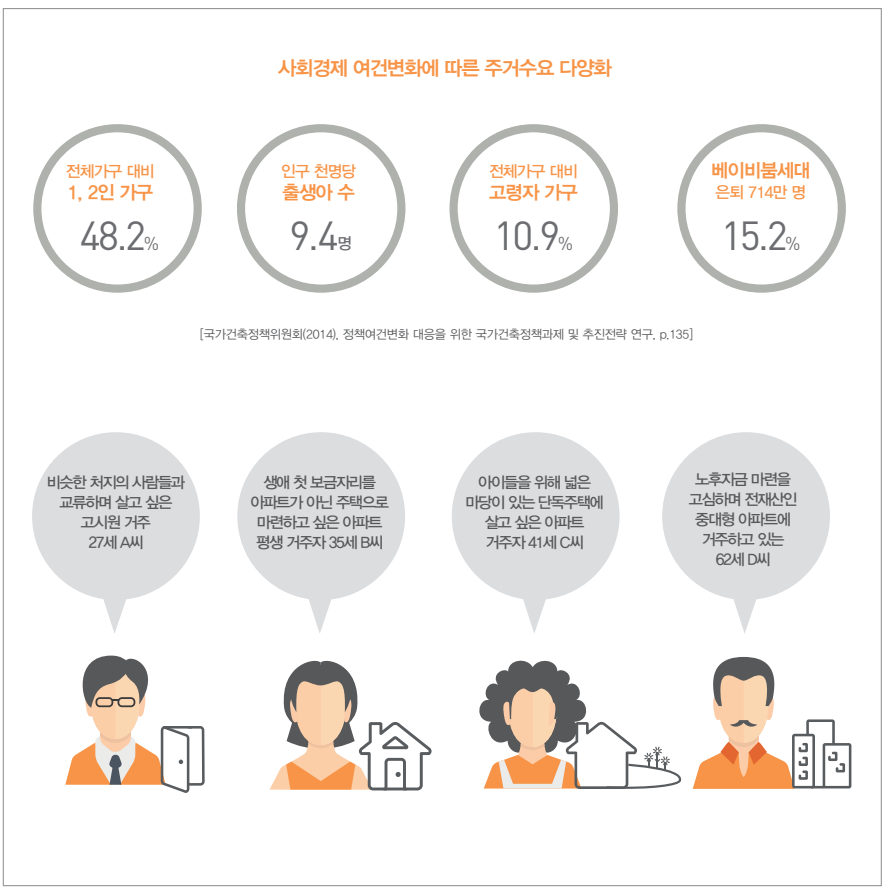


변화하는 국민 삶을 반영하는 새로운 주거문화 선도

새로운 주거문화와 삶을 원하는 잠재수요 증가

인구 ·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수요 변화

- 저출산 · 고령화 및 1 · 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주택 수요 증가
- 청년빈곤층 증가로 인한 새로운 주거소외 계층 증가
-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들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소형주택으로 전환 요구 증대
- 문화 · 복지 · 생활 서비스가 결합된 공유주택, 탈 아파트를 원하는 새로운 주거문화 향유계층 증가



추진배경

변화하는 주거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대량생산시스템의 주택공급정책

협동조합주택, 협소주택, 단독주택, 공유주택 등 다품종 소량생산의 주택유형 등장

1 · 2인 가구 대상 소규모 주택

공유 주택
기숙사형 주택
→ 건축법상 주택 X
준공 후 불법 용도변경
→ 단독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소음
일조
+ 열악한 주거환경
+ 주변지역 주차난 유발

민간의 자생적 노력

땅콩주택



한 개의 필지에 두 가구가 나란히 지어진 형태의 주택으로 토지매입 및 건설 비용 분담

캥거루주택



베이비부머 소유 중대형 아파트 리모델링을 통한 부분임대형 주택 (LH 등 공공위탁)

공유주택



다수가 한 집에 살면서 개인적인 공간 외에 거실, 화장실, 주방 등은 공유하며 두가지 생활패턴 향유

베이비부머세대

" 전재산인 중대형 주택 팔아 노후자금으로 쓰고 싶어.. "
" 중대형 아파트는 팔기가 힘들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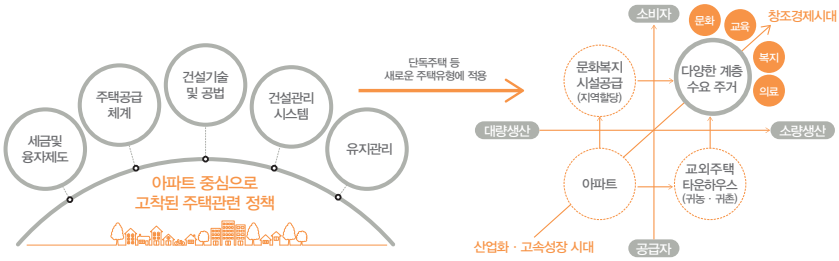
단독주택 수요자

" 아파트 가격의 단독주택 구하기 어려워.. "
" 믿고 맡길 수 있는 시공사와 건축사 어디 없을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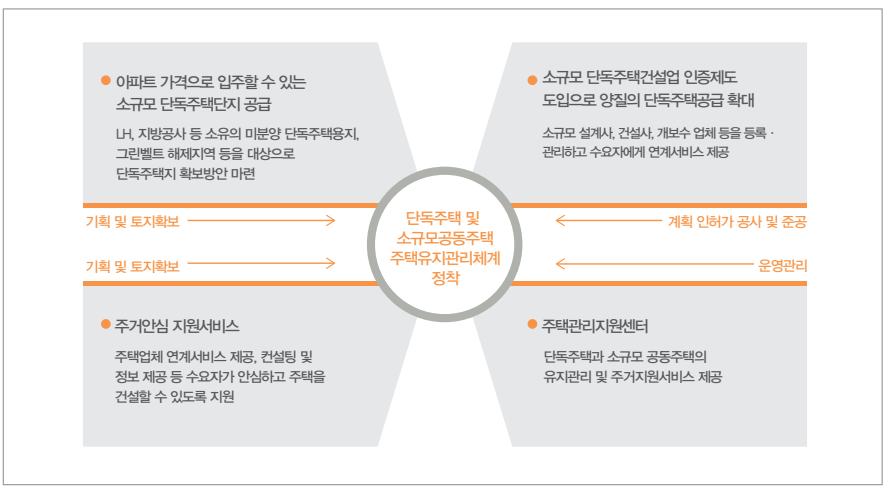
변화하는 국민 삶을 반영하는 새로운 주거문화 선도

소규모 주택사업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활력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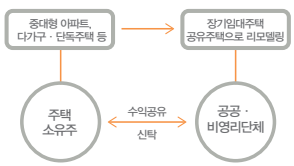
대규모 아파트건설 중심으로 고착된 주택산업정책 →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로 전환



단독주택 및 새로운 유형의 주택건설을 지원하고 양질의 주택건설 유도



민간주택 신탁형 임대주택 공급
→ 유연하고 안정적인 주택시장 유도



공유주택, 다양한 용도 기능복합형 주택
→ 새로운 주택유형으로 제도화

- 기숙사형 주택
- 공유주택
- 어린이집 복합주택
- 숙박시설 복합주택 등

→ 주택용도로 인정
→ 일반인 분양 가능한 주택공급 규칙 개선

새로운 주택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주택산업육성과 지원

[R&D 투자]



[주택도시기금 활용]

- 건설자금 융자지원
- 이자소득세 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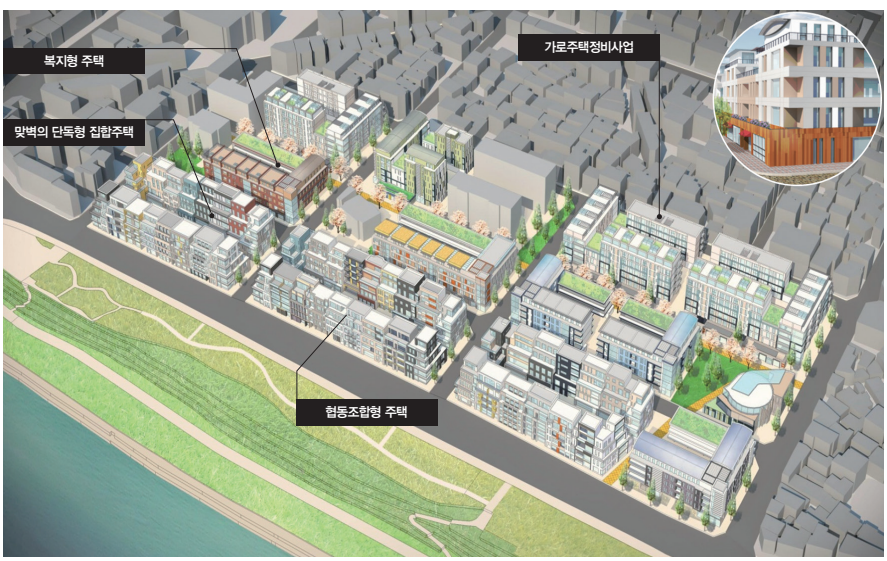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시장에서 공공이 지원하는 주택시장으로 전환
주택정책을 규제중심에서 시장중심으로 전환하여 소비자의 주거선택권 보장

민간주도 · 공공지원의 주택박람회 개최를 통한 주거문화 선도

미분양 공공 단독주택용지, 유휴지, 노후 매입임대주택 활용 주택상설전시회 개최

- 맞벽의 단독형 집합주택 : 아파트 수준의 가격으로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 거주
- 협동조합형 주택 : 공동 생활을 통해 육아 등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주거비 부담 경감
- 임대주택조합의 가로주택정비사업 : 신규주택 건설과 안정적인 임대수익 확보
- 복지형 주택 : 입주자 특성에 맞는 임대주택과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주택상설전시회 구상 예시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5), 다양한 수요대응을 위한 주택공급유형화 다변화에 관한 연구, p. 22]

새로운 주거건축 도입을 위한 주택박람회 개최

- 미개발지나 대규모 시설 이전적지에 주택전시장을 마련하고 미래지향적인 주거건축을 위한 실험으로서 주택박람회 개최
- 다양한 건축가들과 건설사업자 등이 참여하여 건축프로그램이나 세미나, 전시, 각종 부대 행사 등을 기획하여 주거문화 축제 유도

도시수출로 경제성장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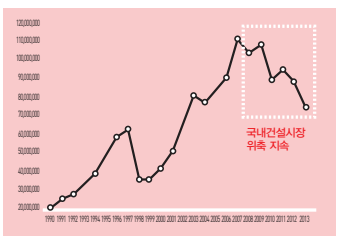
건축 · 도시설계 산업의 새로운 창조시장 개척 가능성

국내 건축 · 도시설계 산업 시장 성장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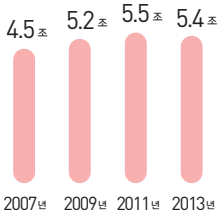
- 국내 건설시장은 2007년 112조원 기록 이후 지속적으로 침체
-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국내 매출도 2007년 이후 정체 상태
- GDP 대비 건설투자의 비중을 고려하면 감소추세로 국내 시장 한계 존재

국내 시장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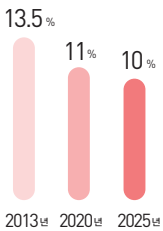
1990년 이후 국내건설시장 수주규모



건축 · 도시 · 조경설계 서비스업 매출 정체



GDP대비 건설투자 비중 감소



국내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기술은 국제수준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미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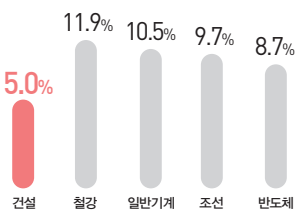
- 해외매출 상위 225대 설계회사의 국가별 해외매출 평균은 네덜란드, 싱가포르, 호주, 영국, 캐나다 순이며 우리나라는 24위

고부가가치 산업인 건축 · 도시설계 산업의 해외 진출로 국가경제 성장 견인 필요

- 현재 주력 중인 단순 시공 · 플랜트 중심 수주는 후발국의 추격, 수익률 악화 등으로 한계 봉착
- 개발도상국의 급격한 도시화로 향후 20년간 2경 7천조원 규모의 시장 형성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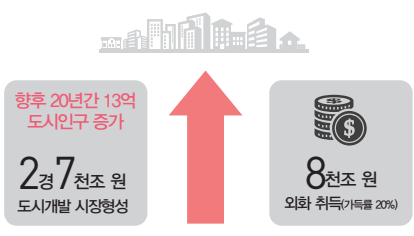
해외건설수주 한계

해외건설사업 수주액은 증가하는 반면 평균 세전수익률은 5% 수준



개발도상국 도시개발 시장 확대

개발도상국의 급격한 도시화



추진배경

도시수출 활성화를 통해 건축 · 건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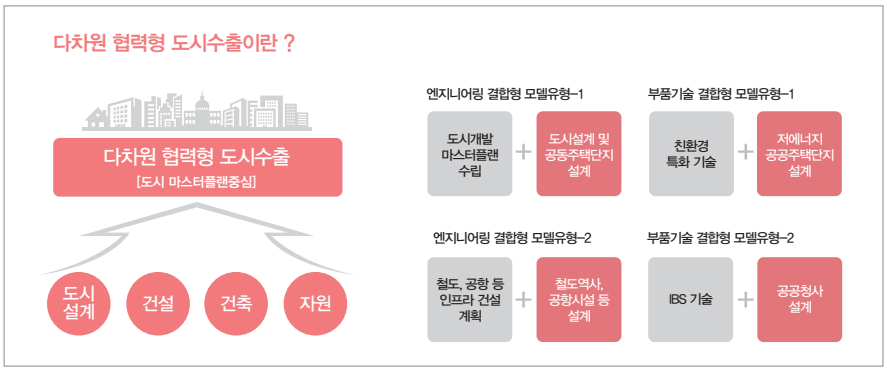
국내 건축 · 도시설계 산업 고도화 및 해외 진출 경쟁력 확보

- 해외 각국이 해외도시개발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
  * 아제르바이잔은 정부 재정난으로 답보상태, 알제리는 알제리 정부의 투자조건 일방적 변경으로 인한 무산, 가나는 자금조달 이자율 관련 국내기업과 현지기업 간의 갈등으로 사업중단

다차원적인 협력형 해외진출을 위한 기본전략 마련

-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창조산업인 건축 · 도시설계 분야의 전문기술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발전 과정에서 축적한 관련 제도, 사업 수행을 위한 금융지원을 포함하는 도시마스터플랜 결합형 해외진출계획 수립
  – 유관기업 후속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고부가가치 유발효과 실현

  * 건축 · 도시설계 산업은 산업분류표 상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 UN, UK DCMS(영국 문화관광미디어부),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창조산업으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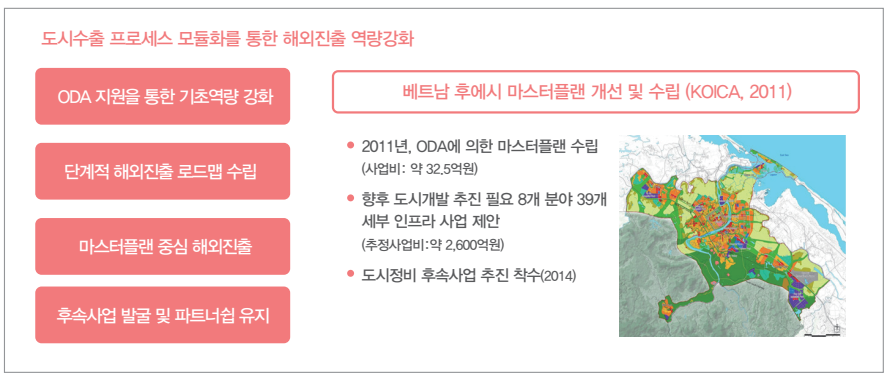


도시수출로 경제성장 견인

다차원 협력형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해외진출 프로세스 모듈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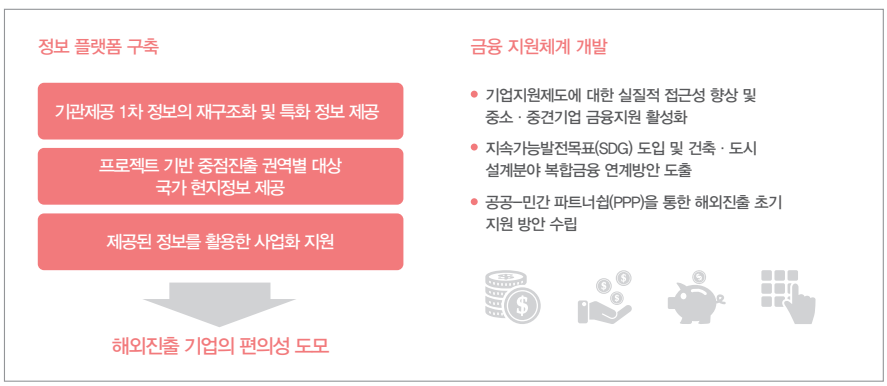
- 정보수집, 리스크 최소화가 가능한 양자간 ODA 사업지원을 통하여 해외진출 기초역량 강화
- 다양한 분야의 후속사업 및 인프라 사업으로 연계 가능한 마스터플랜 중심의 해외진출 방안 수립



해외진출 관련 정보 및 금융지원

- 대상국별 건축 · 도시설계 시장정보 수집 및 제공 플랫폼 구축
- 기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를 위한 금융 지원체계 개발





다차원 협력형 해외진출 전략을 통한 도시수출 경쟁력 확보

다차원 협력형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인력 및 지원조직 구축

해외진출 지원 협의체 구성

- 총리실 산하 해외진출 기업지원 총괄기구 설치 및 민간참여 가능 사업화 지원기구 설치
- 해외진출 관련 부처 간 지원 ·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총괄기구 중심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 일원화



글로벌 기업, 전문가 육성

- 해외진출을 위한 과목개설 및 대학 및 대학원 과정 개설로 해외 건축 · 도시설계 글로벌 전문 인력 양성
- 건축 · 도시문화 홍보 및 기업의 글로벌 역량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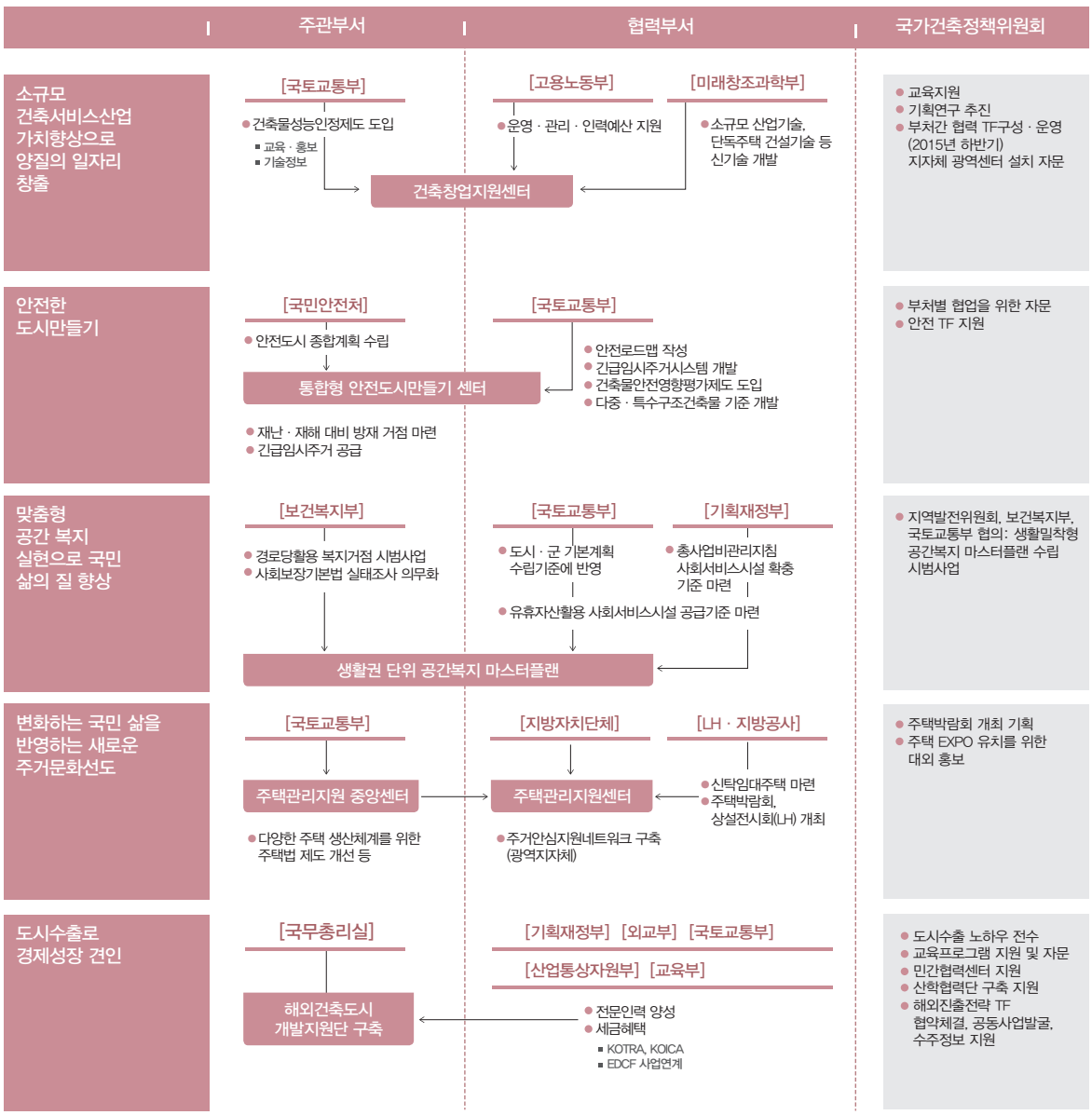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 학과 내 해외 건축 · 도시 설계과목 개설
  – 해외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참여
- 해외 건축도시분야 전문 대학원 과정 설립
  – 대학 특성화 사업(CK), BK21 등 활용

글로벌 역량강화지원

- 해외 진출 인력보호 및 양성
  – 세금해택 및 고급인력의 보수체계 현실화
- 기업의 조직운영 현지화 및 글로벌화 지원
- 관련자격제도 정비 및 기존 자격증 소지자의 해외 맞춤형 재교육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의한 건축진흥원 설립

정책 추진 계획


주관부서
협력부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소규모 건축서비스산업 가치향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토교통부]
건축물성능인정제도 도입
교육 · 홍보
기술정보
[고용노동부]
운영 · 관리 · 인력예산 지원
[미래창조과학부]
소규모 산업기술, 단독주택 건설기술 등 신기술 개발
건축창업지원센터
교육지원
기획연구 추진
부처간 협력 TF구성 · 운영 (2015년 하반기)
지자체 광역센터 설치 자문
안전한 도시만들기
[국민안전처]
안전도시 종합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안전로드맵 작성
긴급임시주거시스템 개발
건축물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
다중 · 특수구조건축물 기준 개발
통합형 안전도시만들기 센터
재난 · 재해 대비 방재 거점 마련
긴급임시주거 공급
부처별 협업을 위한 자문
안전 TF 지원
맞춤형 공간 복지 실현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보건복지부]
경로당활용 복지거점 시범사업
사회보장기본법 실태조사 의무화
[국토교통부]
도시 · 군 기본계획 수립기준에 반영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 사회서비스시설 확충 기준 마련
유휴자산활용 사회서비스시설 공급기준 마련
생활권 단위 공간복지 마스터플랜
지역발전위원회,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협의: 생활밀착형 공간복지 마스터플랜 수립 시범사업
변화하는 국민 삶을 반영하는 새로운 주거문화선도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지원 중앙센터
다양한 주택 생산체계를 위한 주택법 제도 개선 등
[지방자치단체]
주택관리지원센터
주거안심지원네트워크 구축 (광역지자체)
[LH · 지방공사]
신탁임대주택 마련
주택박람회, 상설전시회(LH) 개최
주택박람회 개최 기획
주택 EXPO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
도시수출로 경제성장 견인
[국무총리실]
해외건축도시 개발지원단 구축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전문인력 양성
세금혜택
KOTRA, KOICA
EDCF 사업연계
도시수출 노하우 전수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자문
민간협력센터 지원
산학협력단 구축 지원
해외진출전략 TF
협약체결, 공동사업발굴, 수주정보 지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 개요

위원회 설립 배경

- 질적성장의 성숙시대로 국가정책 전환
- 주요 국가정책으로서의 건축정책의 중요성 증대
- 건축기본법 제정에 의한 위원회 설립근거 마련

위원회 위상 및 기능

- 범부처 성격 법정 위원회로서 대통령 자문기구 기능
- 부처간 건축 관련 정책 조정주체로서의 기능
- 지자체 건축정책 방향 설정 및 네트워크 구축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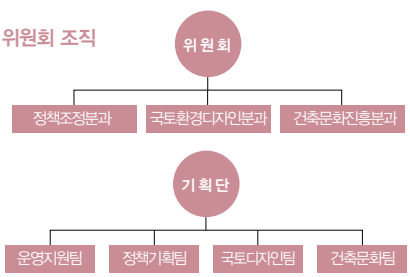
건축기본법 제정 · 공포 (2007년 12월) → 법률 시행 (2008년 6월) → 위원회 발족 (2008년 12월)



위원회 역할

- 국가차원의 건축관련 정책방향 및 개선방향 제시
- 건축관련 법 제 · 개정에 대한 자문 및 모니터링
- 건축관련 정책 및 사업의 컨설팅 및 조정
- 건축문화 선도 및 진흥을 위한 홍보 · 교육

위원회 조직



위원회 추진 경과

2007
- 「건축기본법」 제정 · 공포 (2007.12.21. 법률 제 8652호)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기획단 설치 및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근거 제공

2008
- 6월 「건축기본법」 시행
- 12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발족

2009
- 대통령보고회 2회
- 전체위원회 2회
- 분과위 합동연석회의 6회
- 유관기관 · 단체 간담회 3회

2010
- 대통령보고회 1회
- 전체위원회 4회
- 분과위 합동연석회의 14회
- 유관기관 · 단체 간담회 1회
- 토론회 1회

2011
- 대통령보고회 1회
- 전체위원회 1회
- 분과위 합동연석회의 10회
- 유관기관 · 단체 간담회 12회
- 지역건축정책포럼 6회

2012
- 대통령보고회 1회
- 전체위원회 2회
- 분과위 합동연석회의 30회
- 유관기관 · 단체 간담회 12회
- 지역건축정책포럼 6회

2013
- 전체위원회 2회
- 합동연석회의 2회
- 유관기관 · 단체 간담회 2회

2014
- 전체위원회 1회
- 합동연석회의 2회
- 분과회의 3회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

APPENDIX

부록

1. 제3기 국건위위원 명단
2. 위원회 활동 언론 보도
3. 위원회 연구용역 수행 실적
4. 기획단 직원 명단

1. 제3기 국건위 위원 명단

성명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김 석 철	〈위원장〉 •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 베네치아 건축도시대학교 초빙교수 • 베이징 칭화대학교 초빙교수 • 한중 21세기도시위원회 의장	 박 경 립	〈건축정책조정분과위원장〉 • 강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 춘천시 경관위원회 위원장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이 승 복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사)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회장 •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미) 오크리지국립연구소 연구원	 김 지 민	• 목포대학교 산업기술대학원 원장 • (미) 콜로라도 주립대(덴버) 연구교수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하 기 주	• 경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ICT융합 시설물 성능개선 특성화 사업단장, 교육부)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회장 • 대한건축학회 지회연합회 회장 • (사) 건설기술정책연구원 원장	 온 영 태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장〉 •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한국도시설계학회 학회장 •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 (주) 정림건축사사무소
 이 정 면	•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기 위원 • 경기도시공사 사외 이사 • 법원 전문심리 위원	 이 석 정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독) 슈트트가르트대학 강사 • (독) 슈트트가르트대학 조교수 •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권 영 숙	• (사)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회장 • 용인송담대학교 조명인테리어과 겸임교수 • 서울시민디자인/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 • CoDA(Creation of Design Art) 대표	 박 소 현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미) 콜로라도대 건축도시대학조교수 • (미) 워싱턴대 건축도시대학 강사 •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 집행위원
 김 세 용	•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 • 하버드대학교 객원교수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정 형 민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장〉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 서울대학교 미술관 관장 • 한국미술이론학회 회장 •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박 찬 용	• 영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 영남대학교 자연자원대학 학장 • 한국조경학회 부회장(학술)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 당연직 정부 위원 (10명)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2. 위원회 활동 언론 보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오늘 공식 출범

박근혜 정부의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주도할 대통령 소속 제3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오늘(27일) 공식 출범합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10개 부처 장관들과 위촉직 민간위원 13명을 포함해 모두 23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

새로 구성된 제3기 국가건축정책위는 오늘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회 운영세칙을 비롯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건축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국토환경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통해 국민 삶의 수준과 국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설치됐으며, 이명박 정부 당시인 지난 2008년과 2011년에 각각 1기와 2기 위원회가 출범한 바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_ 2013.12.27 기사

"백년 이상 먹고살 수 있는 한반도 설계가 내 마지막 業"



한 달 전쯤 김석철 명지대 석좌교수(70 · 아키반건축도시연구원 대표)가 전화를 걸어 왔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다들 하지 말라고 해요. 김 기자(그는 20년째 필자를 이렇게 부른다) 얘기 듣고 결정하려고 전화했어요." 김 교수는 12년 전 위암 수술을 받은 뒤 암세포들을 미운 친구처럼 끼고 산다. 작년 여름 또 다른 암이 발견돼 넉 달밖에 못 산다는 선고까지 받았다. 독한 진통제를 밥 먹듯 먹으며 불같이 일하고는, 약 기운이 떨어지면 숨쉬기도 괴로워한다. 그 고통을 목격했던 필자는 순간 목이 메었다. "죄송해요. 선생님(건강을) 위해선 안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맡았으면 좋겠어요." 전화통 저편에서 빙그레 웃는 모습이 보이는 듯했다. "그 말이 듣고 싶었어요." 작년 12월 27일 박근혜 정부의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주도할 제3기 국가건

축정책위원회(국건위) 신임 위원장에 김석철 교수가 선임됐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다. 국건위는 국토환경 디자인 개선 및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2008년 12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서울 광화문에서 숭례문까지 2km 구간을 '국가상징거리 1단계 사업' 구간으로 정하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건립하는 기본 방향이 1기 국건위에서 나왔다. 하지만 한반도 전체의 국토 인프라 설계보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개별 사업에 치중한다는 비판도 없지 않았다.

DMZ내 에덴도시 건설 제안할 것

11일 동아일보 사옥을 찾은 김 위원장은 "작년 항암치료를 받고 퇴원하면서 마음이 급했는데 국건위 연락을 받았다"며 "비무장지대(DMZ)에 에덴동산 같은 21세기형 소도시 건설을 대통령에게 제안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큰 그림은 보이지 않는다. 미래세대에 백년은 먹고살 수 있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 남북관계에서 답이 나올 수 있다. DMZ에 에덴동산이 있다. 지금은 우리가 분단돼 있지만 천혜의 자연환경이 그대로 보전된 DMZ야말로 인류 역사에 공헌할 공간이다. 여기에 농업과 소프트산업을 결합한 인구 5000~1만 명 규모의 소도시를 남북 합작으로 건설하면 통일을 내다보는, 또 세계가 보러 오는 희망의 도시가 될 수 있다."

경기고교 시절부터 '천재' 소리를 들어서일까, 금강산 입구 석왕사 앞에서 태어나 자연에 대한 감수성이 남다르기 때문일까. 김 위원장의 인문학적, 지경학적(地經學的) 상상력은 보통 사람의 생각 범위를 초월한다.

동북아 꼬트머리의 이 작은 땅덩어리가 그에게는 무궁무진한 보물섬이다. 바다 공항을 끼고 있는 인천은 르네상스 시대의 베네치아를 능가할 '아시아의 진주'이고, 한반도 허리를 관통해 중국과 일본을 잇는 동서횡단 운하는 수에즈 운하의 경제성도 뛰어넘는 황금광이다.

하지만 국민도 마음이 급한 판국이다.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장기계획 말고 1년 안에 국민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국건위 계획은 없느냐고 물었다.

한반도 전체가 무궁무진한 보물섬

"행복한 부동산, 창조적 재건축, 도시 수출의 3개 프로젝트가 있다. 쉽게 예를 들겠다. 10년 전 서울 북촌에 자그마한 한옥을 사서 건축사무실로 개조를 하려는데 한옥 목수가 없더라.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한옥에 물받이 홈통은 다 있으니까 홈통 가게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싶어 찾았더니 정말 홈통 수리를 하고 있었다. 지금은 북촌이 한옥촌이 됐고 목수는 300명이 넘고 외국인 관광명소로 떴다. 미국 영화감독 우디 앨런이 부인 순이를 위해 한옥촌 드라마를 만들지 모를 일이다."

그는 국민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므로 발상을 바꾸면 부동산이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에도 개발할 곳은 얼마든지 있다. 4대강 주변도 한강변처럼 살릴 수 있다. 부동산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되고, 개 · 보수를 통해 일자리도 끊임없이 나올 수 있다. 선진국에선 신축보다 재건축 수요가 많다. DMZ 에덴도시 같은 소도시를 설계해 시공까지 통째로 '도시 수출'을 하면 청년 일자리 문제도 풀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여의도 마스터플랜, 서울대 관악캠퍼스, 경주 보문단지 건설을 해냈다. 이제 위원장을 맡

았으니 '아버지 대통령 때 사람'이라는 소리가 또 나오지 않을까.

김 위원장은 일에 눈멀어 그 생각을 못 했다며 한방 맞은 시늉을 했다. "1970년대 말 박정희 대통령이 중동의 도시설계 진출을 시도해 내가 쿠웨이트 신도시를 설계할 수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한번 결정하면 밀고 나가는 힘이 있었다. 내 느낌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힘이 있다. 아버지가 못 이룬 도시 수출의 꿈을 박 대통령이 꽃피울 수 있지 않을까."

서울~세종시 지하 초고속철도 뚫자

한번 정하면 밀고 나가는 스타일을 권위주의적이라고 한다.

"대통령이 국익에 좋은 일을 선택해 밀고 나간다면 아름다운 독재가 될 수도 있다. 하하."

김 위원장한테도 독재적 면모가 없지 않다. 여의도를 보행중심 도시로 설계했는데 가로축 한복판에 5·16광장이 생기고, 서울대 관악캠퍼스를 과천까지 이어진 연구중심 대학도시로 계획했는데 반쪽이 된 것을 지금도 유감스러워 한다.

정치에선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두루 듣고 양보와 타협을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건축과 도시설계에서 그는 자신의 원안이 옳다고 믿는 모습이다. 암에 걸린 뒤 그곳에 사는 사람과 보는 사람들, 100년 뒤 주변에 살 사람과 구경 올 사람까지 좀더 생각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세종시가 현재 모습으로 굳어진 데는 박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 장차관부터 불편과 불만이 쏟아지는데 해결 방안이 있나.

"정운찬(김 위원장의 가까운 후배)이 총리가 됐을 때 세종시 원안을 수정할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다. '상대가 여자'라고 대답하더라. 당시 박근혜 의원이 미생지신(尾生之信 · 미생이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애인을 빗속에서 기다리다 익사했다는 고사성어) 속의 미생인 걸 몰랐던 거지. 2004년 수도 이전 지역으로 충남 연기군이 발표되던 날 수도 이전 불가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나다. 요즘은 '길에서 사는 사람들'이 내게 세종시를 부탁한다고 말한다. 이왕 이렇게 됐으니 세종시를 중부권의 수도로 만들어내야 한다."

김 위원장은 금강변과 한강변의 한 지점을 지하터널로 연결해 15분 안에 초고속철도로 달리는 꿈같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필자가 입을 딱 벌리자 그는 빙그레 웃었다.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120km이지만 지하 직선코스를 뚫으면 프랑스와 영국 사이의 도버해협 유로터널(50.5km)보다 짧고 공사도 쉽다"는 거다.

초고속철도 유로스타로 20분 만에 도버해협을 건너 보면 누구나 절감할 수 있지 않던가. 영국이 더는 섬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세종시에서 서울을 눈 깜짝할 사이에 갈 수 있게 되면 한강변과 금강변 아파트값이 차이 날 이유가 없어진다. 그래도 세종시만으로는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 새만금 안바다를 활용하면 금강-새만금-세종시-대덕연구단지로 연결되는 물류 서비스산업 어번 클러스터가 가능하다. 금강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강이다. 당나라 소정방이 5만 대군을 몰고 백제로 쳐들어 올 때 배를 타고 금강을 거슬러 왔다. 사람과 물류가 유라시아철도의 출발점인 중국 동부 연안의 롄윈 강에서 서해를 통해 금강으로 이어지면 세종시는 세계도시로 도약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남권 신공항 같은 지역공약이 쏟아질지 모른다. 국건위에서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정치인이 국토 인프라를 놓고 장난하는 것은 역적질이나 다름없다. 지방 신공항은 최소한 인천공항과 경쟁할 만한 스케일이어야지 내 고장 살리기 정도로는 안 된다. 거제도와 여수 사이에 21세기 신공항을 만들어 항만과 접붙이면 '아시아 크루즈 루트'가 탄생한다. 중국에서 급속히 늘어날 크루즈 인구를 생각하면 백년은 먹고살 일자리가 나오는 거다. 천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영호남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다. 정치인이라면 세계와 미래를 보고 신공항을 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집권 기간은 짧다. 국건위는 긴 안목으로 한반도를 설계해야 한다."

국토로 장난치는 정치인은 역적이다

그의 말을 듣노라면 한반도 전체가 보물단지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4강에 낀 토끼 모양, 또는 새우 크기의 약소국가가 아니라 지정학적 강점을 타고난 세계의 중심국가다. 두만강 하구에 동북3성–시베리아–동해를 아우르는 항만과 공항을 만들면 북한 경제를 살리는 건 물론 파나마 운하보다 엄청난 유라시아 경제권역도 이룰 수 있다.

말만 들어도 환상적이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박차고 나오는 거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정파가 없고'(?) 맑고 옛날식 애국심이 있다. 120년 전 갑오개혁은 실패했지만 3년 후인 1897년 고종은 대한제국 선포와 함께 다섯 철도망과 항만을 연결하는 한반도 인프라 구축을 선언했다. 나는 박 대통령이 큰 대(大)자 대한민국을 성공시킬 것으로 믿고 싶다."

다른 대통령, 새로운 2013년 체제를 꿈꿨던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평생 친구다. 김 위원장은 "백 교수 집을 설계할 때 진보가 좋은 집 짓는 것을 죄스러워 하더라"고 전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금융위원장을 지낸 김석동 씨는 그의 동생이다.

"가족들에게 남길 유산을 정리한 밤에 꾸란(이슬람 경전)을 보았다. '네가 죽은 뒤 가족이 너를 잊어도 네가 선행을 베푼 사람들은 기억할 것이다. 네가 인간 공동체를 위한 업(業)을 이룬다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라고 쓰여 있었다. 내게는 국건위가 마지막 업이다."

[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 _ 2014.01.13 동아일보 기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전국순회 건축 · 도시정책 포럼 개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제1차 전국순회 건축 · 도시정책 포럼(수도권)'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도권 포럼은 위원회 주최 및 경기도 주관으로 위원회 위원 · 지자체 공무원 · 지역 건축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포럼은 강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성능개선 대책'과 박근석 LH연구원 연구위원의 '집합건물 관리 · 운영 내실화'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전국순회 포럼은 수도권을 시작으로 동남권(9.18), 호남권(10.2), 충청권(10.30), 강원권(11월 중)의 순으로 5차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관계자는 "'이번 지역별 순회포럼을 통해 건축정책 현황을 되돌아보고 급속하게 변화하는 건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이 있는 국가의 건축 정책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며 "포럼결과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_ 2015.07.13 매경닷컴 기사

"건축산업, 아파트 대신 맞춤형 단독 주택으로 활로 찾아야"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거 수요 변화에 따라 '다품종 소량' 주택 늘 것
마을만들기 사업 등에 참여할 전문 건축서비스 산업 육성 통해 해법 찾아야

고령화와 저출산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주거 문화가 대량생산 위주의 아파트에서 맞춤소량생산 위주의 단독 · 공유 주택으로 바뀐다는 전망이 나왔다. 향후 건축 산업도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6일 서울 SETEC에서 열린 '건축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공개한 정책제안을 통해 인구 · 사회구조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가 바뀌면서 장기적으로 새로운 주거를 원하는 잠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위원회는 인구 구조 변화의 근거로 △저출산 · 고령화 · 1,2인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주택 수요 증가 △청년빈곤층 증가로 새로운 주거소외계층 증가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들의 소형주택 전환 요구 증대 △문화와 복지 등 서비스 결합형 공유주택, 탈아파트 수요 증가 등을 들었다.

현재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 중심의 주택 공급 정책은 변화하는 주거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아파트 대신 협동조합주택과 협소주택, 단독주택, 공유주택 등 다품종 소량 생산의 주택 유형이

등장하면서 다품종 소량생산체계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개 필지에 두 가구가 나란히 지어진 땅콩주택, 현관문이 두 개가 있는 부분 임대형 주택인 캥거루 주택, 다수가 한 집에 살면서 거실과 화장실, 주방 등은 공유하는 공유주택 등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내부 설계도 다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주택 정책도 이런 패러다임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제안했다. 위원회는 단독주택 안전성을 제고해, 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우선 정부 차원의 소규모 단독주택건설업 인증제도를 도입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단독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업체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 수요자에게 컨설팅과 정보 제공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독주택 등 다양한 주택 건립을 위해 LH와 지방 공사는 아파트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는 소규모 단독주택단지를 공급하고, 주택관리지원센터(가칭)을 신설해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와 주거지원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새로운 주택 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주택산업을 육성하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건설자금 융자 지원도 실시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제안했다.

위원회는 현재 GDP의 10% 수준으로 정체돼 있는 건설산업도 다품종 소규모 건축 수요에 대응하는 양질의 강소건축 산업을 육성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우선 정부와 지자체가 진행하는 10조원 규모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전문가와 교수, 전문 직능인들이 참여하는 소규모 건축산업 창업 지원 센터(가칭)를 설립해 건축서비스 1인 기업, 아틀리에 벤처 기업이 커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마을 단위 소규모 건축서비스는 비공식 재능 기부로 수행하거나 비전문가가 참여해 품질 보장이 어려워, 전문적인 설계 인력과 서비스를 갖춘 업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정부가 건축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에서 전문 인력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소규모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업체에 법인세를 감면해, 신규 창업 인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bn 신상호 기자] _ EBN 2015.11.06 기사

3. 위원회 연구용역 수행 실적

연도	용역명	연구용역 수행자	용역기간	금액(백만원)
2014	정책 여건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건축정책 과제 및 추진전략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4. 07.~2014. 10.	48.5
2014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복지 실현 및 공공건축 조성 정책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4. 12.~2015. 04.	48.9
2014	지진 · 기후변화 대비 건축방재 선진화 연구	(사)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14. 11.~2015. 02.	19.5
2014	여성의 사회참여 및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해피차일드 환경 조성 정책 마련 연구	(사)한국여성건축가협회	2014. 11.~2015. 03.	19.6
2014	친환경 제로에너지 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14. 12.~2015. 04.	29.9
2014	건축산업 고도화를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 정책연구	서울대학교	2014. 12.~2015. 03.	19.6
2014	농어촌 정주성 향상을 위한 공간환경 조성연구	강동대학교	2014. 12.~2015. 04.	19.5
2014	다양한 수요대응을 위한 주택 공급유형 다변화에 관한 기초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2014. 12.~2015. 03.	19.4
2014	공장생산건축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4. 12.~2015. 04.	29.5
2014	한국적 공간 브랜드 개발 및 확산전략 마련 연구	전북대학교	2014. 11.~2015. 03.	19.4
2014	수요자 중심으로의 건축법령 체계 개편 방향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4. 12.~2015. 10.	68.5
2015	건축진흥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사)대한건축학회	2015. 09.~2015. 11.	17.7
2015	민간시설 유치를 통한 시민친화형 공공건축 리뉴얼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2015. 06.~2016. 02.	48
2015	의료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방안 연구	(사)한국설비기술협회	2015. 10.~2015. 12.	17.7
2015	도시건축박물관 콘텐츠 개발 및 전시기획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5. 10.~2016. 06.	89
2015	중앙정부 공공건축물 수급관리 정책방향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5. 10.~2016. 02.	53
2015	미래정책환경 대응을 위한 건축분야 통계개선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5. 12.~2016. 09.	62.3

4. 기획단 직원 명단(2013.12.16~2015.12.15)

구분	성명	직급	원소속	근무기간
단장	이화순	고위공무원	경기도	2013. 12.~2014. 02.
	김진숙	고위공무원	국토교통부	2014. 02.~2016. 01.
과장(팀장)	조한권	기술서기관	국토교통부	2011. 09.~2016. 03.
직원	강해덕	사무관	국토교통부	2013. 05.~2014. 02.
	유철규	사무관	국토교통부	2013. 05.~2014. 02.
	홍성준	사무관	국토교통부	2014. 02.~
	박광현	사무관	국토교통부	2014. 02.~2015. 01.
	김명진	사무관	문화체육관광부	2013. 04.~2014. 02.
	김영미	사무관	문화체육관광부	2015. 04.~
	김경섭	사무관	행정자치부	2013. 05.~2014. 05.
	안종희	사무관	서울특별시	2013. 01.~2013. 12.
	최원석	사무관	서울특별시	2014. 01.~2015. 07.
	정광순	사무관	서울특별시	2015. 07.~
	김용천	사무관	경기도	2012. 01.~2014. 01.
	최성주	사무관	경기도	2014. 01.~2016. 01.
	박경우	사무관	강원도	2013. 06.~2014. 06.
	윤영산	사무관	충청남도	2015. 01.~2016. 01.
	이근호	사무관	대전광역시	2013. 07.~2014. 06.
	이효식	사무관	대전광역시	2014. 07.~2015. 07.
	양기현	사무관	대전광역시	2015. 07.~2016. 07.
	김서곤	사무관	경상남도	2013. 01.~2015. 01.
	김성덕	사무관	경상남도	2015. 01.~2015. 12.
	조병섭	사무관	전라남도	2014. 08.~2015. 07.
	김범상	사무관	전라남도	2015. 07.~
	남선희	주무관	국토교통부	2010. 11.~2015. 03.
	김정남	주무관	국토교통부	2015. 03.~
	임강륜	전문위원	AURI	2013. 01.~2013. 12.
	성은영	전문위원	AURI	2014. 01.~2014. 12.
	박성남	전문위원	AURI	2015. 01.~2015. 12.
	정소이	전문위원	LH	2013. 04.~2014. 04.
	전영준	전문위원	LH	2014. 08.~
	노정환	전문위원	LX	2013. 03.~2013. 12.
	김재홍	전문위원	한국감정원	2013. 06.~2014. 06.
	최희철	위원장보좌관	국건위기획단	2013. 12.~2015. 12.
	김현우	사무직	국건위기획단	–
	유호걸	운전원	국건위기획단	–

건축문화 기반의 창조경제, 국민행복

– 제3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활동보고서

발행일 2016년 10월 1일

발행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발행인 위원장 제해성

감 수 지원팀장 조세기

편 집 홍성준, 이상민

참여자 김영미, 정광순, 김정남, 박성남, 전영준, 김현우

주 소 서울 종로구 종로5길 68,
코리안리재보험빌딩 8층 809호

전 화 02–397–5523

제 작 성원기획(02–362–1511)